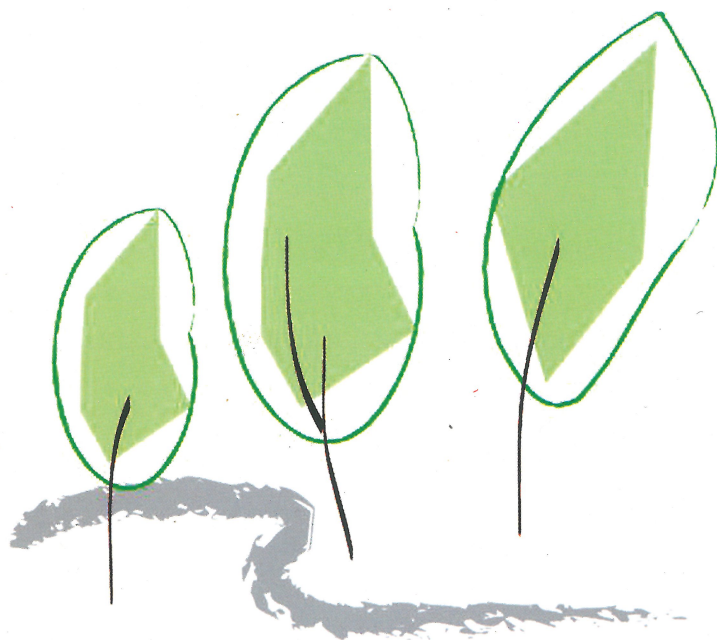




전문가포럼

여성이 본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일 시: 2004년 7월 1일(목) 오후3시~6시

장 소: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후 원:  **여성부**



전문가포럼

여성이 본 안보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평화

- 일시 : 2004년 7월 1일(목) 오후3시~6시
- 장소 : 국가인권위 11층 배움터
- 주최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후원 :  **여성부**



내 용

사 회 : 김정수(평화여성회 일상평화센터 소장)

발제 1 : 한미관계의 변화와 정세전망 - 서재정(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발제 2 : 남북관계 변화와 전망 -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3 : 여성과 안보 - 심영희 (평화여성회 공동대표/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토론 1 : 정경란(평화여성회 국제연대위원장)

토론 2 : 김민정(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전체토론 : 참석자 전원

미군 재배치 논란을 통해 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한미동맹

서재정 / 코넬대 정치학과 교수

주한 미군 재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반적인 재조정에 관해 논의를 계속해오고 있는 한·미 양국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이 논의를 모두 마무리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러한 미군기지의 재조정이 미군 세계적 재편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21세기 신전략을 이행하는 동시에 미군을 21세기형 미래군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편작업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9-11이후의 변화된 세계안보환경에 대응하여 '1-4-2-1 군사전략'을 21세기 신전략으로 채택했다. 이것은 90년대 탈냉전시기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양대전쟁전략'을 대규모 전쟁 2곳에서의 "신속한 승리"와 이중 한 곳에서의 "결정적 승리"로 보다 공세화한 것에 덧붙여 △4개 지역에서의 전쟁억제와 △미국본토방위를 추가한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전쟁억제를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기로 한 4개 지역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승리"를 추구하는 주요전쟁 두 곳의 하나이다. 이 두 곳의 주요전쟁 예상 지역 중 "결정적 승리"를 거두겠다는 "1"의 지역이 한반도가 될 지의 운명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 채택되고 2002년 정식화된 이러한 전략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군은 대대적인 군사력 재배치와 전세계에 걸친 기지 조정작업을 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2003년 11월 25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인 것이다. 미군은 현재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1-4-2-1 전략'을 실천에 옮기는 한편으로 현재의 군사력을 21세기형 미래군으로 변환시키는 작업도 동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첨단과학 무기로 무장된 신속기동군으로 21세기형 네트워크 전쟁을 지향하는 '변환'은 미군의 규모와 배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142-1 전략'과 '변환'을 양대 축으로 하는 미군의 '구조조정'은 주한 미군 재조정과 미군 기지 재배치를 규정하는 전략적 지침이 되고 있다. 즉 한국 내 미군 기지의 재조정은 미군 세계적 재편과정의 일환이며, 단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 △전쟁 발발시 신속한 승리 △미 대통령 결정시 결정적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될 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위협을 모두 압도할 수 있는 군사력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이러한 미군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북에 대한 미군의 공격력을 강화,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아시아·태평양 일대에 대한 미군의 개입능력을 강화,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군사력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군비 경쟁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이루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21세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1. 미국 탈냉전 전략의 변화

1) 부시 행정부의 탈냉전전략과 동아시아 미군 감축 계획

1990년대초 부시(아버지) 행정부는 탈냉전 시대를 맞아 적극적인 군사력 감축을 고려하고 해외에 배치된 단거리 핵무기를 철수하는 등 능동적으로 탈냉전을 모색했다. 구 소련의 군사력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력 배치를 전면 재검토하며, 탈냉전시대의 전략으로 'win-hold-win', 즉 주요한 지역 분쟁이 동시에 두 지역에서 발생하더라도 한 지역에서 군사력을 집중해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두 번째 지역은 현상유지를 하고 있다. 가 첫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두면 군사력을 이동하여 두 번째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략을 채택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르면 냉전시대에 구축해 놓은 거대한 군사력을 유지할 필요가 없이 감축된 군사력만으로도 세계의 주요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미군의 감축안이 마련됐고, 주한미군의 3단계 철수방안도 이러한 세계적 감군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미 상원은 1989년 7월 「년-위너 수정안」을 통과시켜 “아시아에서 동맹국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어떻게 참여시킬 것

이며,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주둔을 어떻게 감축하여 재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청하였다. 이러한 미 의회의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가 작성한 것이 1990년 4월에 제출된 「동아시아전략구상 (EASI)」이다.¹⁾

이 보고서는 탈냉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극동러시아와 북한이라는 ‘냉전형 위협’이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응한 ‘지역의 안정 유지’를 미국의 국익으로 규정했다. 동아시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는 것은 ‘역내 미국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탈냉전 시기에는 미군을 감축해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의 배경에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가 있다. 즉 부시 행정부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권의 위협을 막는다는 봉쇄전략을 폐기하고, 탈냉전 시기에는 이라크 및 북한과 같은 지역적 위협에 대응한다는 ‘지역방위전략’을 채택한 것이다.²⁾ 이러한 전략변화는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모색이 되고 있었는데,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은 이러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 미 군사력으로 ‘기본병력’이라는 구상을 제시했다. 파월 합참의장의 ‘기본병력’ 구상에 따라 미 국방예산과 병력규모를 25% 삭감하기로 했고, 이러한 삭감계획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을 강제했던 것이다.³⁾

따라서 「동아시아 전략구상」 보고서는 한국, 일본 및 필리핀에 배치되어 있는 미 지상군과 공군 병력을 3단계에 걸쳐 감축할 것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1단계 (1년~3년차)에 역내 주둔 13만 5천명에서 총 1만5천명을 감군하고 △제2단계 (3년~5년차)에 철수규모는 명시하지 않은 채 군사력 감축 및 재조직을 실시하며 △제3단계 (5년~10년차)에 지역의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규모 미상의 병력을 추가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1단계와는 달리 2단계와 3단계에서는 병력 감축규모를 정하지 않았으나, 3단계에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태세가 갖추어질 경우 억제목적의 소규모 미군만 잔류시키고 한미연합사의 해체도 검토하도록 되어있었다.

1)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April 1990.

2)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ugust 1991; and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Militar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January 1992.

3) Lorna S. Jaffe, *The Development of the Base Force 1989-1992*, Joint History Office, Office of the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uly 1993.

이러한 3단계 계획 중 제1단계 감축계획에 따라 1992년까지 한국에서는 공군 2천명과 육군 5천명 등 7천여명, 일본에서는 4천800여명의 미군이 감축되었으나, 3천500여명을 감축하려던 필리핀에서는 필리핀 상원이 기지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바람에 감축인원이 1만1천명으로 늘어났다. 한국군의 한국 방위 역할도 증대되어, 서부방위의 주 임무를 맡고 있던 미군 주도의 한미야전사령부가 해체되고, 한미연합사령부 예하의 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분리되어 한국군 장성이 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한국군의 경비책임이 증대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도 한국군 장성으로 임명되었다.⁴⁾

그러나 2단계 감축은 이미 1991년 말부터 차질이 생기고 있었다. 소위 '북한 핵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1991년 11월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 위협과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이 지역 내의 안보가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년·위너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⁵⁾ 이러한 변화 등을 반영하여 미 국방부는 1992년 7월 제2차 동아시아전략구상에서 1993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2단계 이후의 감군계획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⁶⁾

2) 클린톤 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과 동아시아 미군 감축 중단

부시 행정부의 감군정책은 1993년 클린톤 행정부가 통상 'win-win'이라고 알려져 있는 양대전쟁전략을 채택하면서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채택한 '지역방위전략'을 계승하되, 안보적 위협이 되는 지역을 중동과 한반도로 구체화하고 이 양대전장에서 동시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전략이 채택되는 데는 1991년 걸프전과 1990년대 초의 1차 북핵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대전쟁전략은 1997년과 2001년 「4개년국방검토 (QDR)」에서 재확인되며 미국의 21세기 전략으로 굳혀진데 이어 2002년 「국방계획 지침」에서 "1-4-2-1전략"으로 보다 확대되고, 정교화되었다.

4) 서주석, 「한미안보협력 50년의 재조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년 12월, 90쪽, 97쪽.

5) 제2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서, 1991년 11월 21일, 한국 서울. [강조 추가]

6)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 Pacific Rim: Report to the Congress*, Washington, D.C., July 1992.

아스펜 국방장관이 1994회계년도 국방예산편성방침의 형태로 1993년9월 발표한 「전력편성의 전면검토(Bottom-Up Review)」는 양대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첫 공식문서이다.⁷⁾ 1991년 걸프전에 투입됐던 미군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유사한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 필요한 군사력을 추정해 본 아스펜 당시 국방장관의 작업에 기초해서 양대전쟁전략이 정식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전면검토」는 다음과 같이 양대전쟁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미군은 두 개의 주요한 지역분쟁에서 거의 동시에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편성될 것이고 ... 미군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유연성과 능력을 보유할 크기와 구조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양대전쟁전략은 '지역방위전략'의 효율적 이행방안으로 이전부터 검토되고 있던 win-hold-win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군사력과 국방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Bottom-Up Review의 채택과 동시에 미군의 감축계획이 중단된다. 즉 두개의 전구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한 곳에서 승리를 위해 군사력을 집중하는 동안 다른 한 곳은 소규모 군사력으로 전선유지만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즉시 두 번째 전쟁에 군사력을 집중하여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 'win-hold-win'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클린톤 행정부는 대규모 전쟁이 동시에 발생하면 동시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도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2개의 대규모 지역분쟁에서 동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미군 감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전면검토」는 지금까지 미국정부의 안보관계 문서에 항상 삽입되던 "구소련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세계규모의 위협이 존재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그 대신 '대규모 지역분쟁'의 발발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여기에 이라크, 북한, 내전 중인 크로아티아를 주요 불안정지역으로 명시했다. 부시 행정부의 다소 모호한 '지역방위전략'은 이러한 불안정지역에서 발생할 2개의 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양대전쟁전략으로 보다 구체화된 것이다.

이어서 클린톤 행정부가 1995년 2월 「동아시아전략검토」 보고서 (일명 「나이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와 유럽에 각각 미군 10만 명을 유지한다며 전 세계적인 미군 감군계획에 쐈기를 막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⁸⁾ 즉 유럽에

7) Les Aspen, Secretary of Defense, *Report on Bottom-Up Review*, Department of Defense, Washington, D.C., 1993.

8) Department of Defense, *Th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February 1995.

배치한 10만명으로 이라크와 같은 불안정 요소에 대처하고, 아시아에 배치한 10만명으로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의 3단계 감군계획도 1992년 말까지 1단계를 완료한 후, 2단계와 3단계의 추가감축은 “연기”와 “유보”를 되풀이하다가 이로서 완전히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⁹⁾

미 군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감군 중단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확대를 요구하고 나선다. 기존의 군사력으로는 양대전쟁을 동시에 수행해서 승리를 거두기에 힘겨우므로 양대전쟁전략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방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군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크게 현상유지의 수준에서 부분적인 군사력 보강을 한다는 식의 미봉책으로 대응했다. 비교적 온건파인 민주당 정권에서 군사력 증강을 노골적으로 추진할 국내, 국제적 조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에 발표된 제1차 「4개년국방검토(QDR)」은 양대전쟁전략을 유지하면서 미사일방어 연구 등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되 전체적인 군사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한·미 양국은 1993년9월 미국이 「전력편성의 전면검토(Bottom-Up Review)」에서 양대전쟁전략을 정식화한 직후인 11월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고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의 이러한 군사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와 위상 및 한미연합사의 작전태세 등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애스핀 장관은 최근 미국이 「新국방정책」상의 「2개 전장 동시승리 전략」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을 고려하였으며, 한반도 유사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충분한 전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미군의 군사력 구조를 신중하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차제에, 권 장관과 애스핀 장관은 한·미 군사위원회에 한반도와 관련해서 2개 전장 동시승리 전략의 시행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다.¹⁰⁾

9)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은 1991년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한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2단계 감축을 “유보”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2단계 감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진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1991년 ~ 1995년.

10) 제2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1993년11월4일, 대한민국 서울.

3) 부시 행정부의 '신롤백 전략'과 미군 재편

9-11 사태가 터진 지 20여일 만에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2001년 「4개년국방검토(QDR)」는 양대전쟁을 계승하되 이를 더욱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즉 “미군은 중첩되는 시간대에 어느 두 개의전장에서든 미국의 우방과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것” 이라며 양대전쟁 전략을 다시 한번 채택했다. 또한 전쟁시 “[적국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권교체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군사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조 추가). 부시 행정부 이전까지의 양대전쟁전략이 걸프전에서와 같이 전쟁을 도발한 적국과 싸워 원상회복을 목표로 하는 봉쇄정책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양대전쟁전략은 적국의 점령과 정권교체까지도 목표로 하는 롤백정책이라고 할 만하다. 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시간을 들여서라도 군사력을 집중시키기보다는, 신속하게 군사력을 이동해서 곧바로 전쟁에 투입하여 조기에 전쟁을 끝낸다는 전술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신속성과 점령/정권교체라는 공격성은 클린턴 행정부의 양대전쟁전략에는 없던 것으로, 그 호전성은 2년후인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그대로 드러난 바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의 롤백은 기존의 롤백정책보다도 더 공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기존의 롤백정책은 적국의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이에 대해 응전을 하는 과정에서 적국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피동적 자세였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신 롤백 정책은 적국이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안보위협을 사전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다는 능동적 선제공격적 예방전쟁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는 9-11사태 이후 테러리스트의 공격 가능성에 대해 미국인의 위기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안전한 요새’로 만들기 위해서 취할 수밖에 없는 방어책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즉 테러리스트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보복을 하는 것은 이미 피해를 입은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므로 공격 가능성만 있어도 사전에 타격을 입혀 공격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말처럼 미국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마저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안보위협을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안보 편집증 적인 안보관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2001년 럼스펠드 장관이 나토 동맹국들을 방문하면서 선제공격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부시 대통령이 육사 졸업식에서 선제공격을 위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축사에 이어 선제공격은 2002년 공식화됐다. 9-11사태 일주기를 맞는 2002년 9월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에서 부시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고 공표를 한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2002년 5월 「방어계획 지침 (Defense Planning Guidance)」을 채택하여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국방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양대전쟁 전략을 '14-2-1 계획 개념'으로 정식화했다. 여기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에서 "신속한 승리" △"1"은 1개전장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의미한다. 기존의 양대전쟁은 "2"로 유지하면서, "14-1"을 추가하여 미군의 역할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4개년국방검토에서 제기된 다음의 과제들을 정식화하여 미군사력 운용을 위한 지침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본토 방어: "미국 영토 밖에서 가해진 공격으로부터 미국민과 영토 및 사활적 국방기간시설을 방어한다." 미국 본토 방어는 9-11 이후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되어 북미주를 관할하는 사령부와 본토방위국의 신설을 가져왔고, 미사일방어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개 지역에서의 전진억제: "유럽과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도서, 중동/서남 아시아에 그 지역에 맞는 미군을 전진·주둔 배치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안심시키고, 적의 강제를 막아내며, 미국과 미군 및 동맹국과 우방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한다." 4개 지역에 미군을 전진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있을지 모를 침략 및 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적국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을 힘으로 좌절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군의 전진배치는 '안심'을 담보로 하여 동맹국과 우방국을 미국의 영향력 안에 두는 것도 목표로 한다.

△2개 주요전쟁 승리: "두 곳의 작전지역에서 중첩되는 시간대에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에 대한 공격을 신속히 격퇴한다."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 지역 중 2개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전진배치되어 있는 미군을 두 곳에 집중하여 단기간에 승리를 거둔다는 것이다. 이전의 양대전쟁전략과는 달리 이 2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전쟁이 일어난 수주 후 두 번째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상정, 첫 번째 전쟁에 투입됐던 조기가동 미군을 두 번째 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 이전과는 다른 점이다. 전쟁 지역에 배치된 미군만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변환하여 배치지역에 상관없이 분쟁지역에 군사력을 투입하고 집중하는 방식으로 군사력을 운용하려는 '군사변환'과 맞물려 있는 변화이다.

△1개 결정적 승리: "미군이 군사작전을 펼치는 두 개의 전구중 한곳에서는 미

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장차 있을 수 있는 미래의 위협을 제거함으로써 적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다. 명령을 받는다면 영토를 점령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조건을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전쟁 중 미국이 선택하는 한 곳에서는 군사력을 집중하여 ‘정권교체’와 ‘점령’을 수행함으로써 “결정적 승리”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결정적 승리를 위해 군사력 추가투입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고 군사력을 집중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말아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¹¹⁾

4개지역에 전진배치되는 미군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이해를 지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2와 1을 위해 동원될 수 있는 군사력을 의미한다. 또한 전진지역에 미군을 배치하여 미국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포착하고 봉쇄함으로써 ‘1’의 본토방어에도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본토방어를 위한 첫 번째 방어막은 해외에 주둔한 미군이 형성하는 것이며 가능한 한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¹²⁾

이러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미군은 육·해·공·해병의 변혁과 합동화를 추진하고 있고, 정규군과 특수군 및 CIA와의 결합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핵전력을 통상전력의 상위군사력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기하고 핵전력과 통상전력의 통합적 운용을 추구하고 있어 실전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 국방장관실을 위해 작성된 한 보고서는 14-2-1에서는 “전략핵무기가 통상전력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테러리즘과 불량국가들에 대한 다양한 전략적 대응 능력의 한 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³⁾

여기서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은 “2”가 이라크와 북한을 지칭한다는 부분이다. 특히 양대전쟁전략이 수립될 때부터 지목된 양대주적 중 이라크에서는 정권교체와 점령까지 이루었으므로 이제는 북한만 남은 셈인 것이다. “결정적 승리”를 지향하는 마지막 “1”과 관련하여 QDR과 「국방계획지침」은 미 대통령이 그 대상을 선택만 하면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이라크 전쟁이라는

11) U.S.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C. September 30, 2001), pp. 17-21. 이 보고서는 또 “가능한 한 동맹국 및 우방국과 협력하여 평화시 소규모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도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12) United States Army Transformation Roadmap 2003, Department of Army, November 1, 2003, p. 6-2.

13) William M. Arkin, “U.S. Military: War Plans Meaner, not Leaner,” LA Times, March 21, 2004.

‘사막의 늪’에 미군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북을 상대로 결정적 승리를 거두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이 북을 겨누고 있는 한 한반도는 “2”와 “1”의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러시아는 군사적 위협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으며 중국은 현재로서는 “계획을 짜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되고 있다.

이 ‘142-1 전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군사변환 (military transformation)과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첨단과학무기를 이용한 비선형적 첨단전을 지향하는 군사혁신을 이룩하여 미군을 21세기의 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자는 것이 군사변환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서 △정보 및 군사결정의 우위 △정밀 타격 △군사력 신속투사 △전술적 신속성 △군대 방어력 제고 △지상, 해상, 공중 및 우주 전장 지배능력 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환이 이뤄진다면 군사력의 규모는 현재보다 축소되더라도 ‘142-1 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재배치 및 미군기지 재조정 작업도 바로 이 ‘142-1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미군을 4개 지역에 전진배치하되 이중 두 지역에는 신속하게 군사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사변환과 재조정의 상승작용이 나타나면, 보다 작은 군대로도 군사력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42-1 전략’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 현 부시 행정부 군사전략의 요체라고 하겠다.

육군은 142-1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추산하기 위하여 2002년 봄부터 2003년말까지 「전체 육군 분석 2011 (TAA 11)」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는 2년 전의 「TAA 09」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⁴⁾ 주요지역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 휘하에 3만여 명, 태평양사령부에 1만4천여 명의 미군이 필요한 것을 비롯하여 총 23만6천여 명을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TAA 09」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또 주요전쟁 한 곳의 승리에는 미군 21만명, “결정적인 승리”에는 33만명, 테러와의 전쟁에는 2만명이 필요한 등 총 56만1천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다.¹⁵⁾ 미 본토에

14) Lynnette D. Minnick, *Army Reserve Signal Update*, December 10, 2002. <http://www.gordon.army.mil/symposium/2002/2002pri/briefings/RCAO/USAR%20Update1.pdf> 이 대목은 냉전이 끝난 직후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가 양대전쟁전략을 도입하면서 당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군사력을 현상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과 유사한 논리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군사혁신을 추진하면 군대규모를 축소해도 된다고 하던 입장에서 후퇴하여 이제는 새로운 1-4-2-1전략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존 군사력 규모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QDR 2001이 군사혁신론자와 기존 군사력 유지론자 사이의 야합이 아니냐는 의혹의 또 다른 근거가 된다.

15) 미국은 2003년 10월 현재 육군 10개 사단에 현역병 48만5천명, 예비병력 20만5천명, 방위군 35만2천명을 보유하고 있고, 이중 현역병 21만명, 예비병 56만명, 방위군 6

29만2천명을 유지하면 유사지역에 파병하여 14-2-1전략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14-2-1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작전개념'을 개발하여 기존의 해군 체계를 37개 '독립타격단'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¹⁶⁾ 12개 항공모함 전단을 6개월씩 순환배치하여 3개 해외 지역에 배치하는 방식은 더욱 신속적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항공모함 전단은 전진배치에서 모항으로 귀항하는 즉시 6개월 정비를 거치고 6개월 훈련을 받은 후 나머지 6개월간은 전선투입 준비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 해군은 필요한 경우에 6개 항공모함 전단을 전선에 동시에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시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¹⁷⁾ 이와 함께 기존의 해군·해병력은 12개의 '항공모함 타격단' (CSG), 12개의 '기동타격단' (ESG), 다수의 미사일방어 '해상활동단' (SAG), 유도미사일 잠수함, 전투병참단으로 재편되고 있다.¹⁸⁾

'14-2-1 전략'을 이행하는 데는 거대한 규모의 군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군의 역할도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방위군 중 전투부대를 감축하고 지원부대를 증대하기로 한 1996년 계획(ADRS)은 중단된 반면, 방위군 규모를 다소 늘리고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여 동원 즉시 전투에 투입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부정기적으로 방위군을 동원하는 현재의 체제를 바꿔서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동원하는 방법도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군이 신속기동군으로 재편되는 것에 따라서 방위군도 중장비대신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같이 신속한 수송이 용이한 경장비로 무장이 될 예정이다. 향후 10여년 안에 방위군은 대부분 경이동여단이나 다목적사단 등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펜실베이니아 주방위군인 28보병사단 56여단은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재편될 예정으로 있다.¹⁹⁾

만9천명을 세계 도처에 배치하고 있다. Figure 4-1 Army Global Commitments, *Army Transformation Roadmap 2003*, 4-2.

16) Donald Rumsfeld, Secretary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Congress 2003,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03), page 164.

17) David Brown, "Changing with the Times: Conflicts Spur Reassessment of Training, Maintenance and Deployment Cycles," *Navy Times*, April 14, 2003. <http://www.albemarlecommunity.net/Downloads/rhumblines%20.doc>

18) Chapter 1 The Marine Corps: Ready and Responsive Today... More Capable and Decisive Tomorrow, *Marine Corps Concepts and Programs 2004*, page 9. <http://hqinet001.hqmc.usmc.mil/p&r/concepts/2004/PDF/CP04%20CHAP%201.pdf>

19) Major Les Melnyk, "Balancing Force Structure to Meet New Mission," *The On Guard*, September 2003, page 12. <http://www.ngb.army.mil/onguard/32.09/pg12.asp>

2 미군의 군사혁신과 변환

“전쟁기술의 혁명은 점차 크기나 무게보다는 기동성과 신속성으로 규정된다. 영향력은 정보로 측정되며, 안전은 은폐술로 증대되고, 군사력은 정확한 유도 무기의 긴 포물선을 따라 투사된다. 이러한 혁명은 우리 국가의 능력과 우리 국민의 기술, 우리 기술의 우월성과 완벽히 일치한다. 평화를 수호하는 최상책은 전쟁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1999년 9월 연설)

“부시 대통령은 국방부의 변환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방부를 20세기에서 21세기로, 산업시대에서 정보시대로 전환시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이면서도 기민하고,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라디오 데이즈, 2004년 3월 16일)

부시 대통령이 선거유세 기간에 했던 위의 연설과 럼스펠드의 발언은 미군 재조정의 지향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국은 양보다는 질을 앞세우는 방향으로 군을 개혁, 냉전시기의 구식군을 21세기 최첨단군으로 환골탈태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앤드루 마샬국방장관 고문이 내세운 ‘군사혁신’이라는 화두는 이제 바야흐로 현실이 되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새로운 작전개념, 이와 걸맞는 군사조직이라는 삼박자를 결합하여 군사력을 혁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군사변환’은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진두지휘 아래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미군 개혁은 이미 2001년 발표된 「4개년국방검토」에서 그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수 차례의 위계임에서 검토를 거치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의 실전에서 검증을 받은 후 힘을 받아 탄력있게 추진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변환’의 목적을 6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즉 21세기에는 군의 작전 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미군이 대응할 적의 군사력과 작전방식도 이전과는 혁명적으로 달라지고 있으므로 21세기에도 미군이 압도적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즉 △미 본토와 핵심적 기지 보호 △적 안신처 거부 △접근 불가능 지역에서의 군사력 보호와 유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군인과 작전을 연결 △정보네트워크의 향상과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우주작전 향상²⁰⁾이라는 목

20) "DOD's six transformation goals,"

<http://www.defenselink.mil/transformation/dodsixgoals.html>

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 미군은 각 군별로 향후 20여년을 내다보며 각 군을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다. 합동참모부는 미군 변환의 청사진으로써 「비전2010 (Vison 2010)」을 채택한데 이어 이를 갱신한 「비전2020 (Vision 2020)」을 최근 발표했다. 「비전2020」은 미국이 대처해야 할 21세기의 전략적 배경으로써 △미국의 이해가 전지구적 규모이며 △대량살상무기 및 컴퓨터 통신 기술 등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변화 및 미국의 대응에 대한 적응력이 있는 적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이 변환의 6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압도적 기동 △정확한 교전 △집중적 병참지원 △전방위 보호라는 4가지 기본적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야 미군은 21세기에도 대규모 전쟁은 물론 적의 비대칭 전략 및 소규모의 테러 등 모든 종류의 전쟁, 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전방위 우위(full spectrum dominance)'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전2020」은 「비전2010」에서 변환의 주요 도구로 적시된 '군사기술의 혁신'을 군사력 전 분야에서의 혁신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이 특징이다. 변환의 6대 목표와 4대 능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군사기술만의 혁신으로는 부족하고, 전략과 군사조직, 훈련, 병참, 지도력, 군인, 기지 및 군사시설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이 군사혁신은 우선 발달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에 도입하여, 정확하면서도 살상력이 높고 신속한 이동배치가 용이하며 아군의 생존성을 높여주는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 무기체계 중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미사일방어체계이며, 육군은 '미래전투시스템(FCS)'을 개발중이다. 공군은 차세대전투기로 잘 알려져 있는 F/A-22 랫토를 개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속폭격기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음속의 8배에 달하는 속도로 날게 될 이 폭격기는 5.5톤의 무기를 싣고 미국 본토에서 발진해 전 세계 어느 곳이나 2시간 이내에 치명적인 폭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비해 현재 미군이 운용 중인 B-2폭격기는 전세계 폭격이 가능하지만, 이라크전에서 보듯이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기지를 이륙해 폭격이 이뤄지기까지 37시간이 걸렸다.²¹⁾ 해군은 적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고 항해속도는 향상시킨 신형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개발하고 있다. 호주에서 제작한 '조인트 벤처'라는 신속수송선은 군인 400명을 싣고 40노트로 운항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으

accessed on April 19, 2004.

21) "미, 초음속폭격기 개발 추진," 유재훈, 한겨레신문 2003년11월28일

며 스트라이커 장갑차 30~40대를 수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은 2003년12월 지하사령부와 통제센터, 숨겨진 무기 창고를 파괴하기 위한 ‘벙커-버스터’ 소형 핵무기 개발 연구에 750만 달러, 초정밀 공격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는 저준위 핵무기 연구에 600만 달러를 각각 배정하는 등 신형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²²⁾

재래식 작전	신속결전
1) 순차적, 점진적	1) 동시적, 병행적
2) 전개, 숙영, 증원, 계획 후 이동	2) 이해, 투입, 타격, 지속, 계획하며 이동
3) 선형적	3) 분산적
4) 파괴에 기반	4) 효과에 기반
5) 수적 우세, 적 군사력 공격	5) 질적 우세, 적 능력 공격
6) 대칭적	6) 비대칭적
7) 지형중심	7) 시간중심
8) 군사력 중심	8) 결합력 중심

(표1) 재래식 작전과 신속결전개념

[출처: Chris Shepherd, Campaign Plan 2001 Status Briefing (U.S. Joint Forces Command, 2000)]²³⁾

이러한 첨단무기 개발과 함께 작전개념도 혁신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적과의 대치선을 중심으로 전선을 형성해서 싸우는 기존의 개념을 버리고, 각의 지휘부와 지휘 통제 체제를 우선적으로 공격한다는 작전으로 이행하고 있다. △‘순차적 점진적 작전’에서 ‘동시적, 병행적 작전’으로 △‘파괴에 기반한 작전’에서 ‘효과에 기반한 작전’으로 △‘적 군사력 공격’에서 ‘적 능력 공격’으로 작전개념이 변화한 것이다. 이제 전쟁은 전선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핵심부와 후방, 측면 등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정보력과 살상력, 기동력의 우위가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작전개념을 미 합동사령부는 ‘신속결전(RDO)’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작전의 모습은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바 있다. (표1참조)

미국은 현재 분산적이고 동시적이며 비대칭적인 군사작전인 ‘신속결전’을 더욱 강화발전시키고 있다. 적의 반격에 의한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미군은 분산된 상태에서 정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전쟁을 수행한다는

22) “부시, 차세대 핵무기 연구 허용 법안 서명,” 워싱턴 AFP/연합뉴스 2003년12월2일
 23) 김성한, “해외주둔 미군 재조정과 한미동맹“ 2003년10월17일에서 재인용.

‘네트워크 전쟁’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²⁴⁾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적군을 단시간에 와해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전개념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은 정밀무기와 정보통신 및 신속기동 기술의 발달 덕분에 적군에 대한 정보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적 타격에 쓸 수 있는 정밀무기와 실시간 정보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군 구조도 이와 걸맞은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스트라이커 여단이다. 기존의 육군은 M1 에이브람즈 전차와 브래들리 장갑차 등으로 중무장된 부대와 이러한 중무기가 없는 경보병으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중무장 부대는 신속한 전개가 불가능하고 경보병은 신속전개가 가능한 대신 적의 화력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등장한 것이 스트라이커 여단전투팀으로 이 부대는 신속전개가 가능하면서도 적의 화력을 막아 낼 수 있고 적을 제압한 화력을 보유한 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 부대를 무장하는 주요 무기체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 계열은 가볍기 때문에 C-17 수송기나 고속수송선에 탑재되어 신속전개가 가능하다. M1 에이브람즈 전차는 70톤, 브래들리 장갑차는 30톤인데 비해 스트라이커는 19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단전투팀은 96시간 안에 세계 어느 곳이든지 파견이 가능하며, 1개 사단 파견에는 120시간, 5개 사단에는 30일이 걸리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²⁵⁾ 뿐만 아니라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기본적인 몸체에 어떤 무기체계를 설치하느냐에 따라 통상적인 장갑차의 기능 외에도 전차, 대전차 미사일포, 지휘소 등 10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하나의 무기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조립식 다목적 부대를 만든다는 변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기체계로 무장된 스트라이커여단은 군인 수는 기존 여단보다는 작으나 실질 전투력은 더 강하다.

육군은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 6개 팀을 신설하여 기존의 경무장병력과 중무장병력 사이의 공백을 채우는 동시에 기존군사력을 미래형 ‘목적군’으로 변환시키는 디딤돌로 이용할 계획이다. 미 육군은 이미 2000년초부터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에서 이러한 변환과정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 2개 팀이 구성되어

24) Director, Force Transformation,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Network-Centric Warfare Primer*, Winter 2003.

http://www.oft.osd.mil/library/library_files/document_318_NCW_GateFold-Pages.pdf

25) 에릭 신세키 육군 참모총장이 1999년10월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Global Security.org, Stryker Brigade Combat Team,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army/brigade-ibct.htm> [accessed May 22, 2004]

일부는 현재 이라크 전쟁에서 실전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다. 미국은 2008년까지 4개 여단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중 일부는 하와이와 알래스카에 배치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활약할 것으로 보인다.²⁶⁾

육군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작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릴 수 있으며 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신속전개가 가능하며, 기민하며, 다목적이고, 치명적 이면서도 다양한 환경에서도 생존/유지성이 높은 ‘목적군’으로 재편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코만치 헬리콥터와 ‘미래전투시스템(FCS)’ 등 신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중에 있으며 미래전투시스템에 대한 최종결정은 2006년에 내려질 예정이다.²⁷⁾ 2008년에는 1개 구식여단을 ‘미래전투시스템’으로 무장된 미래형 부대로 전환하는 것을 필두로 하여 매년 2개 이상의 구식여단을 미래형 부대로 전환할 계획이다. 신무기체제로 무장된 첫 번째 미래형 부대는 2010년부터 운용되기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첨단화된 부대인 제4보병사단과 제1기갑사단은 변환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고강도 분쟁에 투입될 가장 강력한 부대 역할을 수행한 후 2012년까지 제일 마지막으로 미래형 부대로 전환된다.²⁸⁾

해군은 ‘해군력 21’, 해병은 ‘해병대 전략 21’에서 기존의 해군·해병력을 보다 결정적이며 기민하며 장기적 유지가 가능하고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환

26) 린스펠드 국방장관은 2002년12월 4개 스트라이커여단의 편성을 승인하고, 2개 여단의 추는 검토하기로 한 후, 2003년12월 2개 여단의 추가를 승인했다. 워싱턴주 포트 루이스 소재 2사단 3여단과 25사단 1여단은 이미 스트라이커여단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어서 172보병여단 (알래스카)이 재편되고, 루이지애나 2기갑연대는 이라크전쟁에서 복귀하는대로 개편작업에 들어가 2006년까지 재편이 완료될 예정이다. 25사단 2여단 (하와이 쇼필드 기지)은 2006년에 마지막으로 펜실베이니아 육군주방위군 28사단 56여단은 2008-2010에 스트라이커여단으로 재편될 계획이다. 미 육군은 QDR에 따라 2007년까지는 유럽에 1개 스트라이커 여단을 배치할 계획인데, 이 경우 2사단 3여단을 현재 유럽에 배치되어 있는 여단으로 전환시키고, 포트 루이스에 있는 2사단 3여단은 통상의 여단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 Striker Brigade Combat Team (SBCT),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army/brigade-ibct.htm> [accessed May 22, 2004]

27) U.S. Army, *On Point for Readiness Today: Planning for Security Tomorrow*, Army Modernization Plan 2003, Annex B: Force Structure (Crganization), page B-1.

28) Megan Jans, “LTG Dick Cody: Combat Commander-Army G-3, calls it as he sees it,” *Base Camp Briefs*, March 2003, page 4.

<http://www.gwcausa.org/bcb/BCBMar03FINAL.pdf>

을 추구하고 있다. 해군·해병력 변환은 △해양기지 △해양타격 △해양방패 △군사력네트워크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 해양기지는 적의 화력이 미치기 어려운 해상에 떠 있는 기지를 구축하여 작전지휘와 화력, 병참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지는 외국에 고정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기지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지인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게 이동배치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게 된다. 이러한 해양기지는 이지스함을 기반으로 한 미사일방어 등 해상에 다층으로 구축된 보호망으로 안전을 확보한다. 해양기지 뿐만 아니라 미국본토 및 작전지역에까지도 보호망을 제공한다는 것이 해양방패의 개념이다. 해양타격은 보다 향상된 지휘통제력, 정보력, 정확성, 은밀성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해양에서 적진 깊숙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사력 네트워크는 해양기지, 해양타격, 해양방패 등 세 가지 요소를 서로 결합시키는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군인과 무기체계, 감시장치, 병참 등을 서로 연결하여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면서도 분산된 군사력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²⁹⁾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트라이던트 잠수함 4척을 유도미사일과 특수작전부대용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기존의 함단을 '항공모함타격그룹(CSG)'과 '기동타격그룹(ESG)' 등으로 재편하는 중이다. 그 첫 번째 기동타격그룹은 중동근해와 서태평양에서의 임무를 성공리에 마쳤다는 자체 평가를 받고 있다.³⁰⁾ 기동타격그룹은 해상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군력을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장차 다양한 작전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공군은 차세대 전투기 F/A-22 랫토를 시험비행단계에서 실전배치단계로 발전시키고 있는 한편, '세계타격전담반(GSTF)'이라는 작전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개념은 기습공격과 해외기지 이용 제한이라는 문제점에 대응하여 작전지역 밖에서 항공모함 및 잠수함과 합동으로 B-2전폭기와 유도미사일로 무장된 B-1 B-52로 전쟁 초기에 적을 공격한다는 개념으로써, 다양한 정보장치들과 전폭기, 작전지휘본부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군 조직의 변화와 함께 중요하게 등장한 것이 합동전 조직이다. 미국은

29) Chapter 1 The Marine Corps: Ready and Responsive Today... More Capable and Decisive Tomorrow, *Marine Corps Concepts and Programs 2004*, page 6.

<http://hqinet001.hqmc.usmc.mil/p&r/concepts/2004/PDF/CP04%20CHAP%201.pdf>

30) Fargo, p. 60.

이미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육해공군을 통합한 조직을 운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QDR에서 제시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상비합동전담반'이라는 작전개념을 개발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전투지역의 전후좌우를 망라하여 이동 및 고정된 적 목표물을 정확하고도 집요하게 추적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 함으로써 적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합동군사력 투사능력은 '변환'을 주도하는 개념이 되고 있다.

미군은 이렇게 첨단무기+신작전+신조직의 삼위일체로 21세기 첨단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도 이뤄지고 있는데, 그 특징은 △미군이 차지하고 있는 하부구조 면적의 축소 △동맹국의 보호하고 적국을 막아내기 위한 해외주둔의 지속 △유사시 필요한 장비와 보급물의 사전배치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력 운용 △유사시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 집중 능력 등이다.³¹⁾ 다시 말해서 해외주둔 미군수와 기지 면적은 축소하되, 미군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하여 필요한 지역에 군사력을 신속하게 집중시킨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무거운 무기체계와 보급물은 현재 한반도 해역과 인도양 등에 배치해 놓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전에 전진배치, 미군의 이동과 집중을 쉽게 한다는 방침이다.

미군의 이러한 '변환'의 모습은 아프가니스탄전쟁과 이라크전쟁에서 부분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는 전혀 사전준비가 없었던 상태에서 9-11사태 한 달 만에 작전계획과 군사력 구성, 배치, 작전이 모두 이뤄질 정도로 신속한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미군은 특정지역에 고정 배치된 '불박이 군대'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민성과 적응성을 보여준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특수부대가 해군의 F-14또는 공군의 B-52와 합동으로 작전을 펼친 것으로 합동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과시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에서도 육·해·공군의 작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합동작전이 주요 역할을 했는데, 서부 이라크에서는 특수부대의 작전, 북부에서는 바다와 전략적 거리에서의 작전, 남부에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전격전 ('마하4 전격전')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뤄졌다.³²⁾ 군대의 진격속도만 빨라진 것이 아니라 센서로 표적을 획득하여 무기

31) Jim Garamone, "Global Military Posture's Part in Transformation,"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Washington, December 2, 2003.

http://www.defenselink.mil/news/Dec2003/n12022003_200312022.html

32) Paul Stone, "Cebrowki sketches the face of transformation," American Forces

를 발사해서 파괴시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는 이 과정에 24시간이 걸렸으나, 아프간 전쟁에서는 45분, 이라크 전쟁에서는 11분으로 급격히 감축됐다. 센서와 지휘통제, 공격무기가 실시간 정보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편 변환을 둘러싼 논쟁은 이라크 전쟁을 계기로 더욱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군사혁신과 변환을 지지하는 세력은 이라크 전쟁이 변환의 성과와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변환에 비판적인 세력은 이라크 전쟁이 변환의 성과를 입증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특히 해외기지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가속화되고 있다. 터키정부가 미군의 통과권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때문에 미국은 남북에서 동시에 이라크로 진격하려던 작전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야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자국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미군의 작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미래군은 해외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형태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무인장거리 비행기 △짧거나 열악한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 △공해 상에서 작전을 전개할 수 있는 해군이나 해병 △원거리에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유도미사일과 레이저무기 등 신형무기체계를 중심으로 미군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해상기지’를 육군과 공군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³³⁾ 이렇게 미군을 재편하면 해외미군기지 필요성도 줄어들고 해외에 배치된 미군의 규모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라크 전쟁은 미 육군의 적정규모를 둘러싼 논쟁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재 육군의 공식입장은 현역 10개 사단으로 “14-2-1 전략”과 변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2008년까지 6개 스트라이커여단전투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라크 전쟁은 육군의 입장이 옳았음을 확인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육군 규모를 8개 사단으로 감축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방장관실 관리들은 육군의 규모를 6개 사단까지 감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스트라이커 여단도 4개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양대전장에 각각 2개 사단을 배정하고, 그 외의 소규모 작전에 2개 사단을 배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전부터 10개 사단으로는 양대전쟁전략을 이행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던 세력

Information Service, accessed on April 19, 2004.

December 29, 2003. http://www.defenselink.mil/news/Dec2003/n12292003_200312291.html

33) Ronald O'Rourke, Iraq War: Defense Program Implications for Congres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4, 2003).

은 “1-4-2-1 전략”과 이라크 전쟁으로 말미암아 육군규모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세기 육군장관이 임기보다 일찍 퇴임하게 된 것도 육군과 국방장관과의 이러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라크 전쟁은 이러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보다는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⁴⁾

3. 주한미군 재조정

주한미군 재배치 및 기지조정은 이와 같은 미국 전략변화와 군사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및 기지조정 작업의 일환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1월 25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본격 시작하겠다고 발표, 전략변화+군사변화+미군 재배치라는 삼대과제를 수행할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 및 미군 ‘변환’은 단기적으로는 ‘1-4-2-1 전략’ 중 ‘2’와 ‘1’의 표적이 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군의 공격력을 강화, 한반도 안보상황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일대에서 벌어질 지 모르는 불특정 위협에 대한 미군의 개입능력을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상대로 한 ‘지역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을 기지로 사용할 것이며, 한국군은 한국 내에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국 ‘지역군’의 병참지원 및 후방지원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1-4-2-1’ 중 미군이 전진배치되는 4개 지역에서 2개는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이며 한 곳은 인도양을 포함한 중동지역이다. 아시아 지역에 두는 미국의 군사적 비중과 군사력이 절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 사이의 군사력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군비경쟁을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평화)를 이루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미군 재배치는 단기적으로 보나 장기적으로 보나 21세기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미군 재배치에서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미군세계태세검토 (Global Posture Review)」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군인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군사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이다. 군대의 이동·작전 속도와 기민성, 조합성, 능력을 향상시킨다면 군인 수는 줄어도 오히려 군사력은 강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미 해군의 규모는 이전

34) 앞의 글, p. 24.

보다 감소했지만, 유사시 이용 가능한 해군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라크 전쟁 초기 전체 함정의 절반 가량을 투입했던 해군은 주요 전투가 종식된 후 이들 대부분을 전선에 배치하는 대신 모항으로 복귀시켰다. 그 결과 오늘날 위기가 발생한다면 6개 이상의 '항공모함타격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상비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 능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2004년 여름 항공모함타격단 7개를 세계 도처에서 동시에 운용하는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³⁵⁾ 육군의 경우 군인 수를 6%가량 증대시킬 계획으로 있지만, 군사력 운영방식의 혁신덕분에 전투력은 30%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군인으로 사단을 신설하는 대신 다양한 군사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독립적 여단으로 재편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육군 여단 구조의 75%는 위기에 대응할 능력을 항상 갖추게 될 것이다.³⁶⁾

1) 대북 군사력 강화

미국은 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전환하면서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오산 비행장과 평택항을 통해 이동이 용이한 점을 고려해 전체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신속기동군의 타격 목적지가 반드시 동남아시아 등의 해외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신속기동군이라는 군사조직의 변화는 변화된 무기체계와 작전개념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신속기동군의 한강 이남 배치는 대북군사력 강화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면 왜 미군의 후방배치가 대북 공격력 강화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미군의 후방 배치가 미군의 생존능력을 높인다는 사실이다. 1994년 '북핵위기'가 한참이었을 때 미국이 군사력 사용을 검토했으나 엄청난 피해가 예견되기 때문에 군사작전을 포기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북한이 전방에 배치해 놓은 1만여기의 장거리포가 미군을 불모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 사용을 포기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서울 이북에 배치되어 있는 미2사단을 북의 장

35) "Navy Tests New Operational Construct: Seven Carrier Strike Groups Underway for Exercise 'Summer Pulse 04,'" Department of Defense News Release No. 538-04, June 2, 2004.

36) Defense Secretary Donald H. Rumsfeld testimony before the U.S.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hearing on the FY 2005 Department of Defense budget, February 3, 2004.

사포로부터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 세계최강 미군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것이고,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안전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못하는 후방으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오산·평택이 미 2사단의 재배치 지역으로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러한 재배치는 미군의 생존성을 높이므로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독트린 이행이 용이해진다. 한편 북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선제공격을 억제할 수단의 하나를 잃게 되는 셈이다. 북의 미사일 위협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우선 이 위협은 현재 전방배치된 미군이 받고 있는 장거리포 위협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것이다. 그리고 패트리엇 등을 이용한 미사일방어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면 북의 미사일 위협도 대부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요한 점은 사실 미군의 후방 배치라는 위치변화보다, 군사작전이 공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부시 행정부가 선제공격을 공식적으로 채택, 필요하다면 예방전쟁 차원에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고 정권교체와 영토점령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침략적 전쟁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상대로 이뤄진 것이다. 이러한 공격적 정책과 전략을 이행하는 군사전술도 공격적이다. 미군은 적군과 전선을 형성해 전면전을 벌이는 대신 적군의 지휘부를 최우선 순위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즉 이라크전쟁에서 ‘충격과 공포’라고 불렀던 작전과 같이, 전쟁 초기에 막강한 공군력과 미사일 능력을 동원하여 적의 지휘부와 지휘통제 시스템을 파괴·교란시킨다는 전술이다. 수뇌부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여 적군을 마비시킨 후에도 적군과 일일이 정면전을 하기보다는 우월한 기동성과 정보능력을 이용하여 핵심적인 거점을 장악하는 첨단 기동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미군 재배치가 완료될 시점이면 미2사단 휘하 부대는 ‘미래전투시스템’으로 무장된 미래형 ‘목적군’으로 재편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형 부대는 기존의 여단보다 군인 수는 적을 지 몰라도 최첨단 무기로 무장되므로 살상성과 생존성 등이 크게 향상되어 기존의 중무장 여단보다 강한 전투력을 가지며, 여러 가지의 작전에 투여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진다. 이 여단의 또 다른 특징은 가벼운 무기체계로 무장이 되어 C17 수송기나 군함으로의 수송이 쉬운 신속전개군이라는 점이다. 공군 기지와 항만을 끼고 있는 오산·평택은 북한의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한다는 작전계획을 이행하기에 이상적인 기지인 셈이다.

밑에서 지적하겠지만 한미동맹은 한반도 내의 역할에서 세계적 규모의 활동으

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미국의 현 군사전략을 놓칠 위험을 안고 있다. 군대는 미래의 위협에 대비도 해야 하지만 최우선의 사명은 현재의 전략을 이행해야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현 군사전략이 북한을 ‘주적’으로 지목하고 “신속한 승리”와 “결정적 승리”를 요구하는 한 미군의 최대임무는 이러한 전략을 이행할 능력과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조정은 일차적으로 14-2-1 전략의 이행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점은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3년의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한미동맹의 세계적 역할에 공감을 표시하고, 군사변혁과 군사력 증강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하면서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향후 3년에 걸쳐 한국 방위와 직접 관련된 약 110억불 상당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이행할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³⁷⁾

그런데 북한은 ‘14-2-1 전략’의 대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핵태세검토와 반확산전략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미국의 양대전쟁전략과 대량살상무기 전략이라는 십자포화의 화점 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북한이라는 사실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2002년 초 공개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2001년 9-11사태이후 급증한 안보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안보위협은 과거의 억제태세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핵전력 태세를 검토하고 향후 지침을 제시하는 이 이 보고서는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당면위기, 잠재적 위기, 예기치 않은 위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이라크와 북한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모두 적용되는 “만성적인 군사적 우려”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대북 핵전쟁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37)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2003년11월17일, 대한민국, 서울. [강조 추가]

또한 2002년 12월에는 대량살상무기 반확산정책을 담은 「대량살상무기 퇴치 국가전략」이 발표되었는데 이 문서는 2002년 5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17호」와 「본토안보 대통령명령 (Homeland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4호」의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한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명령서에는 보다 공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⁸⁾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에 따르면 비밀 대통령명령은 대량살상무기나 장거리미사일 확보에 근접한 (close to acquiring) 국가나 테러리스트 조직에 대한 '선제공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⁹⁾ 이러한 선제공격의 정식채택은 냉전시기 내내 핵무기의 선제공격은 자제하면서 막대한 보복공격의 능력만으로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억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변화이다.

부시행정부는 이미 「핵태세검토」에서 북에 대한 핵공격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단지 지금까지의 문서들은 미국이나 동맹국이 공격을 받은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공세적 방어'를 채택했는데 비해 이번에는 적국의 구체적인 군사행위가 없어도 선제공격을 하겠다는 점에서 전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번에 확인된 「국가안보 대통령명령 17」은 적국이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커녕 공격을 위한 군대이동 등의 준비작업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즉 적국으로 '찍힌' 국가가 미사일 개발만 하더라도 또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운영만 해도 선제공격 하겠다는 노골적인 일방적 군사주의의 천명이며, 지난 2002년말 북한 화물선 나포사태는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공세적 반확산 정책이 실행에 옮겨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 명령서의 비밀 부록이 북한을 이란, 시리아, 리비아와 함께 반확산정책의 중심대상이라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명령서에서 지적인 국가 중 미사일과 핵 능력에 있어 북한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에서 북은 미국의 "방지", "능동적 방어" 및 "선제공격" 등의 집중포화를 맞는 목표가 될 가능성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것이다. 부시정부의 이러한 군사전략 변화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북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동결시켜온 제네바합의가 파탄으로 몰려가고 북의 미사일이 국제적 문제로

38) The White House, 「National Strategy to Comba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cember 2002.

39) Allen, Mike, and Barton Gellman, "Preemptive Strikes Part of U.S. Strategic Doctrine; 'All Options' Open for Countering Unconventional Arms,"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11 2002, A.01.

부각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즉 북한은 미국이 핵심적 안보사안으로 여기고 있는 반확산정책의 최우선 타겟이며 북한이라는 '확산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핵무기 사용, 선제공격, 군사적 봉쇄, 외교적 압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여기에 '142-1 전략'의 주요 목표가라는 사실은 미군변환과 군사력 재배치의 현재적 타겟의 하나가 북한임을 반증하고 있다.

2) 주한 미군의 성격 지역방위군으로 전환

"한반도에서 분쟁이 재발할 위험성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배치와 작전개념을 지금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차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기가 발생하여 우리의 대응이 요구될 때 대처할 능력이 없을 것이다."⁴⁰⁾

미 육군은 '142-1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지 및 주둔 재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통합 세계기지 및 주둔 전략' (Integrated Global Basing and Positioning Strategy)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전략에 따라 '육군무기 사전배치 (APS)' 재조정과 '육군 지역 함단 (ARF)' 개념 및 '원정기지(expeditionary basing)' 개념 등이 개발되고 있다. '육군무기 사전배치 (APS)' 재조정의 주요목적은 4개 핵심지역의 위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미 육군은 중화기를 수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분쟁에 개입하기 위해 한반도 해역을 비롯해 몇 개 지역에 육군용 무기를 사전배치해 놓고 있다. 일단 유사시 경무장한 군인만 분쟁지역으로 파견하면 현지에서 무기와 군인을 결합하여 즉시 전투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육군 신속전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군은 "142-1 전략" 채택 후 지역에서의 위기에 보다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전배치무기의 구성과 위치를 조정했다. 육상 사전배치무기 뿐만 아니라 해상

40) Richard E. Hawley, Michael B. Donley, and John R. Backschies, "Enhancing USAF's Pacific Posture: How the Air Force can Transform to Support a New Joint Warfighting Architecture,"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September 2002, p. 54.

사전배치무기도 ‘육군 지역함단’ 개념에 따라 재조정되고 있다. 이 개념에 따라 해상 사전배치무기는 3개 집단으로 분할되어 분산배치되었으며, 작전지역 사령관의 필요에 따라 신속적으로 배합이 가능하도록 조합식 능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원정기지’는 전방 해상에 “떠 있는 기지”를 배치하여 육군의 집결지 및 공중공격 출발기지로 사용한다는 개념이다.⁴¹⁾ 미군이 어디에 배치되던지 상관없이 여타 지역에 언제라도 파견되어 신속한 작전이행을 할 수 있도록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주한미군의 작전반경이 한반도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고 미군변환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것이 동맹국에 대한 무시나 경시를 자동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일방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부시 행정부이지만 ‘1-4-2-1전략’과 변환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도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원하고 있다. 「합참비전2020」가 이전의 「합참비전2010」와 다른 주요한 부분의 하나는 군사동맹 및 연합군과의 작전을 중요시한다는 점이다.⁴²⁾ 합동작전이 변환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에 따라 합동사령부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합동작전에서 동맹군 등 다국적군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합동 및 연합 작전에서의 상호호환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호환성은 무기체계 등의 기술적 호환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군사조직과, 과정, 전문영역 등에게까지 적용되는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⁴³⁾ 동맹국에 대한 첨단과학무기 구입 압력 및 동맹군의 첨단과학군화를 촉구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동맹국이 미국의 전략이행에 도움이 되고 군사변환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미국은 또 동맹의 역할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동맹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략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서 동맹군이 활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린스펠드 국방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나토의 새로운 지휘구조가 형성되었다. 노포크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변환사령부는 나토라는 동맹 전체가 21세기의 도전에 응전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나토 대응군은 문제지역을 다루는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 있어서도 대서양동맹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나토가 나토 조약에

41) United States Army Transformation Roadmap 2003, Department of Army, November 1, 2003.

42)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10*

43) General Henry H. Shelton,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Joint Vision 2020*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2000), pp. 16-17.

규정된 지역과 유럽을 벗어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제안전지원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관련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한 성과이다.”⁴⁴⁾

용산기지 이전을 둘러싼 협상이 비용협상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은 한미동맹의 성격 및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한국의 신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국가안보의 핵심적 사안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기지 이전’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우선 용산기지 이전 자체가 미국의 전략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리며 진행되어 온 것이 확인된다. 즉 미군의 세계적인 감축계획이 본격화한 1990년6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중단된 1993년 6월 사실상 추진중단 상태에 들어갔다. 2001년말 한미양국이 주한미군 아파트 건립과 연계하여 용산기지 이전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신군사전략 채택 직후인 것이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은 ‘북핵문제’를 이유로 1991년 2단계 주한미군 감축을 “연기”하기로 한 이후 1992년부터 1994년까지는 2단계 감축을 “유보”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1995년부터는 2단계 감축에 대한 언급 자체가 사라진다.⁴⁵⁾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이 믿는 한, 주한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1990년부터 되풀이되다가 1995년부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에서 사라진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미국이 1995년 2월 발표한 「동아시아전략검토」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둔 미군의 수를 10만명으로 정하고 더 이상의 감군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한 직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증감은 한국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왔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완강한 휴전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1953년 휴전을 결정했다. 이후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 방위는 일차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신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1969년 「닉슨 독트린」

44) Donald Rumsfeld, News Conference with NATO Secretary-General, April 6, 2004. http://www.defenselink.mil/transformation/what_is_transformation.html accessed on April 19, 2004.

45)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1991년 ~ 1995년.

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시켰다. 1970년대 말 카터 대통령도 주한미군 2사단의 철수계획을 발표했다가 미 군부와 의회의 반발과, 미 정보기관의 북군사력 재평가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냉전 종식 이후 부시 대통령은 1991년 전세계적 규모의 전술핵 철수를 단행하는 일환으로 한반도 내 전술핵을 철수했으며, 탈냉전에 따른 해외주둔 미군병력의 축소를 이행하는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했다.

2002년 12월 제34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현대화할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토론”의 장으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을 구성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의 전략이 2001년9월 「4개년국방검토」와 2002년 5월 「방어계획지침」에서 ‘1-4-2-1전략’으로 정식화된 직후에 나온 것이다. 한미 양국은 2003년 2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 예비회담에서 “동맹관계의 강화”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확인하고, 이러한 원칙 하에 2차회담에서 “미군을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재조적하는 것의 중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⁴⁶⁾

이렇게 한미동맹의 목적이 ‘한국방어’에서 ‘지역방어’로 전이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초 미국의 전략이 ‘지역방위전략’으로 전환된 직후에 이에 걸맞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1992년 한·미 국방장관은 이미 세계적 냉전이 종식되었고 이어서 한반도에서도 긴장이 완화되는 경우 한미동맹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는 인식 아래 21세기의 한미동맹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한국국방연구원이 2년 이상에 걸친 공동연구 끝에 1995년 한미동맹은 장차 ‘지역방어’의 목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⁴⁷⁾

이러한 권고는 1995년과 1996년에 개최된 ‘중장기 한미안보대화’에서 재확인된다. 1996년 28차 연례안보협의회의에 보고된 ‘안보대화’ 결과는 2단계의 한미동맹 변화를 전망했다. 즉 1단계인 남북대치단계에서는 한미연합 방위체계를 유지하지만, 북 위협이 소멸하는 단계에서는 연합지휘체제 및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이 단계에서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에서 2001년까지도 ‘한미동맹 미래발전 공동협약’을 통해 이러한 인식이 재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46)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sult of the Second Meeting of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MND News Release, June 5, 2003, p. 2.

47) Jonathan D. Pollack and Young Koo Cha, eds., *A New Alliance for the Next Century : The Future of U.S.-Korean Security Cooperation* (Santa Monica, CA: Rand, 1996). 한글판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1995년 발표

한편 한·미 당국자간의 이러한 합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가 시작된 93년부터 한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억제와 동북아지역 안정유지에 크게 기여”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에 “동북아지역”이 명시적으로 추가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어 2000년에 개최된 제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은 “한반도 내 안정에 대한 당면한 위협이 감소된 후에도 이러한 양국 동맹관계는 동북아 및 아·태 지역 전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⁴⁸⁾ 한미동맹의 활동범위를 아시아 태평양 전체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는 이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매년 확인되며, 2003년의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도 “한미동맹은 동북아와 아시아태평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지역동맹적 역할을 재확인했다.⁴⁹⁾

2002년 연례안보협의회의의 결정에 따라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한국군과 미국군 사이의 역할분담과 실천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즉 주한미군은 휴전선 일대의 작전과 관련한 10개의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전하여 전방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증대하는 동시에 미군은 후방으로 이동하여 북의 장거리포가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역할에 집중한다는 역할분담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재조정은 90년대 초부터 제시되었던 구상대로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며, 지역방위는 미군이 주도하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편과정에서 과학기술을 이용한 군사변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은 미국의 ‘군사변환’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은 군사변환을 주한미군에 적용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향후 3년 동안 약 110억 달러 상당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군사변환이 주한미군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군에도 군비증강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2002년 “연합방위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기술 및 과학의 발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군도 첨단과학군으로 변환시켜야 한데 이해를 같이 한 데 이어 2003년에는 “한미연합사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미국의 군사변혁을 참조하면서 한국 군사력의 발전적 변화를 추진한다”는 의지를 조영길 국방장관이 공식화했다.⁵⁰⁾ ‘협력적 자주국방’을

48) 제 3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00년9월21일, 서울. [강조 추가]

49)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2003년11월 17일, 서울 [강조 추가]

50) 제34차 및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내세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이 군 현대화 명분으로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 및 한국군의 전방역할 증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전략변화 및 군사변환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4. 결 론

특정지역이나 특정위협을 구체적으로 거명하기 보다는 ‘능력에 기반한’ 안보정책을 추구하는 부시 행정부 하에서 ‘지역안보’라는 내용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부시행정부의 ‘142-1전략’과 ‘군사변환’이 맞물리면서 한미동맹의 목적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재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5월25일 기자간담회에서 찰스 캠벨 미8군사령관 및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주한미군은 앞으로 역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우발상황이 발발할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 투입될 수 있을 것”이며 “역내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투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는 “21세기 한·미 연합군은 인도주의작전이나 동북아평화 유지 작전에도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군의 작전영역도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⁵¹⁾ 즉 주한미군의 작전반경이 전 세계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한국군마저도 한미동맹의 이름 아래 전세계적인 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발언이었다. 이 발언이 물의를 일으키자 한국 국방부는 “한미연합군의 역할 확대는 사실이 아니며, 지금까지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고 발뺌을 하고 “캠벨 중장도 ‘본인의 발언 내용은 한미동맹의 미래를 조망하면서 가정적인 발전방향을 예시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한미연합사의 작전반경을 지역적 내지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한국방어에서 세계분쟁개입으로 전환하려는 논의를 1990년대 초부터 진행시켜 왔다. 부시 행정부에 들어와서 미국의 군사전략이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군사변환에 힘이 실리면서 이러한 논의는 한·

51) 김민석, 박신흥, “‘전세계 어디든지 주한미군 투입가능’, 캠벨 한미연합사 참모장...’활동범위 확대’ 처음 밝혀,” 중앙일보 2004년5월25일. 문관현, “캠벨 ‘한미연합군 동북아평화유지군 활동’(종합) ‘주한미군 일방적 재배치 없을 것’ 연합뉴스, 2004년5월25일.

미 국방부간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이 이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파견되어 미군 지휘하에 있으며 2004년8월이면 주한미군 일부가 이라크 전쟁에 바로 투입된다는 사실은 한미동맹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고 한미동맹을 전 세계적 군사소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미래의 청사진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2004년2월24일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을 개정하여 한반도와 북미지역에 한정된 한국과 미국의 상호 군수지원 대상지역이 전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했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한다.⁵²⁾

한미동맹의 역할을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하게 위배하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대한민국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만 조약당사국이 행동하도록 되어있다. 또 1954년 1월 19일 미 상원이 한미방위조약을 비준하면서 추가한 양해사항도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조건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작전을 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또 동 조약 제3조는 그 적용범위를 "각 당사국은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당사국의 행정지배하에 있는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현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군이나 미군이 한국의 영역을 벗어나서 작전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그 작전범위를 한국 이외의 동북아시아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양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역할변화와 활동범위 확대는 한미동맹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한국군을 이라크 전쟁에 파견하고, 주한미군을 역시 이라크 전쟁에 차출하는 행위는 양국군이 이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두되 실질적 내용은 변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의 적용범위를 전세계로 확대한 것도 상위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대로 둔 채 하위법을 수정하여 상위법이 규정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변경시키는 방식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⁵³⁾

52) "한·미 군수지원 범위 전세계로 확대- '한미상호군수지원협정' 개정안 서명," 연합뉴스, 2004년2월27일.

현재 미국 측은 오산·평택지역의 시설공사가 2008년까지 완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군 변환 계획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2008년부터 구식군을 미래형 ‘목적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므로 이때까지 시설이 완공되면 목적군으로의 변환이 그만큼 손쉬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래 육군의 규모에 대해 미 군부 안에서조차 뚜렷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오산·평택에 건설할 기지의 규모를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더욱이 미 육군조차 ‘해양기지’의 가능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장차 해외에 유지될 미군기지의 규모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규모를 추정하여 기지와 시설을 건설할 경우 정작 미군이 이전할 시점이나 그 이후에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논점 중의 하나는 숙소와 기지 등의 건설비용이다. 정확한 비용을 추산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이나 9-11과 14-2-1 전략, 군사변환 등을 놓고 볼 때 신시설물들이 기존 시설물 건설비용보다 훨씬 더 비쌀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 자재비와 인건비의 상승 때문이 아니라 9-11 사태 이후 미국은 해외주재 공관과 기지의 안전규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테러공격을 받더라도 미군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설비를 갖추는 것은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부상했다. 또한 군사변환도 미군에 대한 ‘전방위 방어’를 강조하고 있어 기지와 시설물의 방어성은 이전에 비해 훨씬 강화되어 있다. ‘군사변환’의 일환으로 첨단군이 활동할 수 있는 첨단시설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도 건설비용을 높이는 또 다른 이유이다. 또한 미국은 “군인이 우리가 보유한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인식에 따라 “군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했으며 숙소와 환경, 월급 등을 개선”하고 있다.⁵⁴⁾ 숙소와 가족용 아파트, 기지 등이 지금의 수준보다 향상되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인식은 미군기지 건설비용을 상승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는 미군 재조정

53)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이 헌법은 개정하지 않은 채 ‘창조적 헌법해석론’에 근거하여 유사법제 등 하위 법체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보통국가화’를 추진하고, 미일 신방위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하여 미일상호방위조약의 성격과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유사성을 보인다.

54) Donald Rumsfeld, Interview with WPHT, Philadelphia, March 16, 2004. <http://www.defenselink.mil/transcripts/2004/tr20040316-secdef0544.html>

이 한국의 안보이익과 합치하는가,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저해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분쟁에 투입되고, 한국은 이러한 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오히려 미국의 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군이 미군을 쫓아 아시아나 타 지역의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⁵⁵⁾ 더욱이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고,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력이 대폭 강화된다는 것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오히려 강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군축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다자적 협력안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도하는 미국의 전략과 군사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 위에서, 이러한 변화가 한국 및 동북아에 미치는 장단기적 안보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기존 한미상호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한미동맹 변환작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4년6월5일)

55) 미국과 중국 간 대만을 둔 전쟁이나 중국과 일본 간 댜오위다오/센카쿠 분쟁에 한국이 끌려 들어갈 위험성을 김영희 기자는 “미사일을 든 고래들의 싸움에 새우가 부엌칼 들고 나서는 꼴”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김영희, “한국이 중국을 공격한다?” 중앙일보, 2004년5월28일.

<발제문>

남북관계의 현황과 전망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1. 남북 관계 현황 평가

○ 대화의 정례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구체화로 남북 신뢰 관계를 유지

- 장관급 회담 및 경제협력 추진위는 다소 입장차이가 상존하지만, 남북 채널의 안정적 가동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대한 양측 공감대를 재확인
- 특히 개성공단 시범공단 실시 합의는 '핵문제'와 교류협력의 병행추진을 구체화 한 것으로 평가됨

○ 핵문제 해결에서 남북관계의 비중과 역할은 여전히 제한적

- 평화적 해결 원칙에 대한 공감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은 핵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전략 및 경제정책 변화의 대외 홍보 창구를 여전히 남쪽에서 찾지 않고 있음(미국 민간대표단의 방북)

○ 남북한의 신뢰수준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다차원적 접촉, 대규모 접촉 등이 빈번해지면서, 남북 모두 '대화 문화'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음
- 북측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보여 지며, 이에 따른 검열과 대응이 회담 문화를 보다 경직화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

- 남측역시 회담 준비 과정에서 부처별 역할분담 및 체계적인 운영전략 개선이 필요

2 남북관계의 환경: 국제환경과 국내환경

□ 국제환경 악화로 대북정책의 선택폭은 제한

o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

- 3차 6자회담에서 쟁점현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보였지만, 여전히 입장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미국: 북한이 요구하는 '핵 포기'의 제도적·재정적 보상에 소극적
- 북한: 대선을 앞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2004년은 '상황을 악화하지 않으면서 쉬어가는 해'로 설정할 것으로 예상
- 북미 양국의 입장차이로 6자 회담이 지속되어도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많지 않음

o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의 상충할 가능성이 존재

- 북한 인권 문제: 미국 상하 양원의 '북한 인권법' 채택과 UN의 대북 인권 결의안으로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요구
-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 북한은 PSI를 대북 해상 봉쇄의 일환으로 규정하면서 반발, 미국은 한미 동맹차원에서 한국 참여를 요구

o 북한의 2004년 중하반기 대남 정책의 핵심은 워싱턴과 평양의 입장에서 한국의 선택을 확인하고 요구하며,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논란이 많은 선택(인권, PSI, MD 등)에서 한국의 애매한 입장은 북미 양국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다는 점에서 보다 확실한 입장을 조기에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

□ 총선이후 대북정책 개선에 대한 국내적 요구는 증대하고 초당적 협력구조가 마련

○ 여당의 의석 확대와 야당의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초당적 협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 특히 경제협력 사업(금강산 관광 정부보조금, 개성공단 공적 투자, 경제협력 기금 확대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민노당의 원내 진출로 대북정책의 전향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국내 탈냉전을 위한 법·제도 개혁을 준비해야 됨

-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경우, 교류 협력법을 비롯한 각종 남북관계 관계 법령의 후속 개정 작업이 필요

- 대북정책 추진과 관련된 조직 개편 등

○ 남북관계 활성화에 대한 국내적 요구의 증대는 대북정책 추진의 기회이면서, 위기로 작용

- 남북관계 개선은 국제환경(특히 핵문제 해결수준)과 북한의 변화수준에 달려 있어, 국내환경 개선이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은 제한

- 오히려 북한은 국내적 요구를 근거로 남측에 대한 기대감 및 요구를 강화화할 것으로 예상

3. 향후 남북관계 전망

□ 2004년 '상황 관리' 및 준비하는 해

○ 국제환경 교착으로 본격적인 남북관계 활성화가 어려움

- 우선적으로 국내환경 정비에 주력
- 남북대화에서 '상황 관리'에 주력: 신뢰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
-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과 대북정책이 상충하지 않도록 외교안보 부처간 조정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평화변영정책의 중장기 구상에 대한 재검토

- 평화변영정책은 외교·통일·국방·경제의 총괄구상으로 각 분야의 방향이 상충되지 않아야 함(평화적 통상국가/자주국방, 동북아 협력/한미 동맹등)
- 부처간 중장기 대책 구상체계가 필요

□ 초당적 협력을 통한 다차원 남북대화

○ 향후 남북대화 추진에서 초당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

- 가능하다면, 야당 대표의 '특사'역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됨
- 대북정책의 '초당적 협력'을 조기에 가시화해야 국내적인 '남남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남북대화 추진과정에서 '야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

○ 제도권내 협력으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통일문제의 책임을 공유

- 미래지향적 대북정책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냉전시대의 법과 제도들을 개정

○ 주요 의제는 여야가 합의하여 구체적으로 지정

- 국가보안법 폐지: 포괄적 적용의 인권시비를 불식하고, 국제적 인권규준 충족
 - 교류협력 시대의 '북한'에 대한 재규정(이적성, 이적단체 등의 개념)
- 교류협력법 개정: 승인절차의 간소화, 디지털 시대의 교류 등을 포함

□ 경제협력의 청사진 마련과 국내적 기반 마련

- Re-Design 개성: 공단개발 중심에서, 역사적 통상도시(개성상인)·고려의 수도(문화와 역사, 관광)·평화의 상징성(최초휴전 협상지) 등 '새로운 상상력'에 걸맞는 개발전략의 내용과 우선순위 조정
 - 시범공단을 추진하면서 평화적 상징도시로의 이미지를 중심이동
 - 철도, 도로 연결이후의 남북한 탈냉전 상징 사업 추진: 평화를 위한 관광 열차, DMZ의 평화적 이용
- 경험 활성화를 위한 국내적 재원조달 체계 확립: 경험기금 및 각종 재원조달 방안의 총괄 조정
- 경험추진 기구 정비: 정부내 각종 범정부적 협력기구 및 민관협력기구 모색
 - 개성공단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전반적 남북경협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전담 추진체계가 필요
 - 개성을 포함한 주요 협력사업의 단기대책마련 및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 재원조달을 종합적으로 전담
- 정부와 공사,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체계적인 협의 모델이 필요
 - 남북경제협력의 분야가 넓어지고, 정부 부처간, 민간과 정부간 남북경협 정책결정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험추진체계 정비가 필요
 - 교통, 정보통신, 물류, 농업 등 경제협력의 구체적 분야별로 협력 영역이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음

□ 인도적 지원 활성화

- 대북지원 정책을 '무상지원'에서 '개발원조'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

- 식량지원이나 비료지원은 '인도적 지원'원칙에서 지속 지원
- 기타 의료, 보건, 복지 지원은 경험기금 항목중 '개발원조'조항을 신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북한의 개혁 유도 사업에 우선 지원
- 실질적인 민관협력 집행기구가 필요
- 필요하다면, 대북지원을 'ODA'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사례 조사, 집행체계를 모색

o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제도화

- 금강산 면회소 조기 착공(올 상반기) 및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추진
- 이산가족의 북한 장기체류 보장 등 '이산가족교류에 관한 특별법' 제정
- 특수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군포로 생사 주소확인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납북자 가족의 상봉 적극적인 추진

o 탈북자 대책을 강화하여 하나원 등 각종 시설과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대폭적으로 확대

<발제문>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심영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차례

1. 들어가는 말
2. 안보의 개념과 문제 : 여성 비안보 보이지 않는다
3.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4. 왜 여성 비안보는 보이지 않는가? : 여성 비안보 재생산 메커니즘
5.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하기 : 보호자/피보호자의 관점
6.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과 변혁을 위한 과제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안보에 관하여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은 여성과 안보에 관하여 다음의 질문을 던진다.

- 1)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 2) 왜 여성안보는 가시화되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가?
- 3) 여성의 비안보는 어떻게 재생산되는가?
- 4) 여성 비안보를 극복하고 비젠더화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주로 Peterson (1992)과 Tickner (1992, 2001)의 젠더화된 안보와 비젠더화된 안보에 대한 견해를 재조직해서 소개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고 한반도에서의 여성안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안보의 개념들과 문제: 여성 비안보 보이지 않는다

2.1 국가안보: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이 관점은 국제관계학에서 현실주의에 입각한 접근으로서 국가안보는 국가의 군사적 안보,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지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타인의 불안정에 기초하는 안보개념이다. 국제관계학에서 현실주의는 1차대전후 관심을 집중시켰던 집단안보보장체계와 국제연맹의 한계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타난 조류로서, 국가간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파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국제체제는 무정부상태이기 때문에 국가는 반드시 가지 자신의 손으로 안보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현실주의자들은 믿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의 이런 안보추구행위를 잘 드러내는 은유가 루소의 사슴사냥 이야기이다 (Tickner, 2001, 49-50).

다섯명의 배고픈 사람들이 사슴을 잡아서 나누기로 했지만, 한 사냥꾼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끼가 도망가자 (그 토끼를 잡기 위해) 곧 사슴을 도망가게 한다. 이 사냥꾼은 공동의 이익에 위배한다. 즉,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의 장기간의 협조적인 이해관계를 그 자신의 단기적인 이해를 위해 희생시킨다. 현실주의자들은 이 이야기가 국가안보 문제의 본질을 설명해준다고 보고 있다. 즉 상호협력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인간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므로 일부 국가와 사람들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벽한 안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현실주의자들은 전쟁의 준비를 통해 국가안보를 최고로 신장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국가의 안보는 힘, 특히 군사력의 극대화를 통해서나 (모겐소) 자조의 원리에 충실함으로써 (왈츠)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된다. 즉 국제적으로 권력관계를 통제할 국제정부가 없기 때문에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스스로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힘의 극대화나 자조라는 처방은 국제질서의 무질서와 상호불신의 상태에서 위협스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질서와 상호불신의 국제환경하에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기대는 “세력균형”에 의해 확보될 수 있다. 세력균형은 국제체제에서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는 현실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이 안보개념의 문제점은 세력균형론의 불확실성, 비현실성, 부적합성 등의 한계로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이론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전쟁이 승리자이건 패배자이건 양자의 파멸을 초래할 수 있는 현실 속에서 세력확장이라는 현실주의적인 처방은 사실상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핵무기를 개발한 후 50년이 지난 지금 핵무기에 대한 억지 (deterrence)는 위협에 대한 민감도의 저하, 위기 상황시의 사고발발 가능성 및 제한적인 핵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1982, , Tickner, 2001에서 재인용)

또한 현실주의적 안보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남성의 경험에 의존하는 서구 중심의 역사적 세계관에서 출발한 것도 문제이다 (Tickner, 2001;

Peterson, 1992). 이는 뒤의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2.2 인간안보와 공동안보

현실주의에 대한 비판자들은 좀 더 광범위한 전지구적인 안보에 대한 식견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대안적 모색으로 등장한 안보의 개념으로서 공동안보와 인간안보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공동안보”의 개념은 대량살상무기체계가 보편화된 시기에서 와서는 군비증강의 역학 자체는 다른 측의 불안정이 오히려 자기측의 위협을 높인다는 통찰에서 나왔다. 공격이 최상의 방위라는 사고의 위협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비공격적 방어라는 대안적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르바초프). 이 개념의 논리는 각국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위험한 행동을 포기하며 그와 같은 행동들의 처벌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성립된 정치적 질서의 신뢰성을 상호간의 안보로 규정할 수 있다. (조민, 2001, 임운택, 2004). 즉 적을 위해하거나 위압하기보다는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다. 이것이 공동안보의 토대가 된다.

이 관점의 주요내용은 상호파괴가 아닌 공유된 생존 (joint survival rather than mutual destruction)이란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Independent Commission for Disarmament and Security, 1982). 이들이 사용하는 용어인 “공동안보” (common security)의 개념은 동서문제 (군사적 갈등)는 물론, 남북문제 (경제적 불평등), 환경파괴, 경제 사회적 상황악화 등 광범한 비군사적 요인을 포괄하고 있다.

공동안보의 관념에서 과학·기술적 군사무기체계가 고도의 수준으로 발달한 현대의 정치적 안보는 적을 위해하거나 위압하는 방식 보다는 오히려 적과 협력함으로써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통찰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안보는 지속적인 군비증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협상과 군비감축을 통해 증진된다. 여기서 군축이야말로 새로운 방식으로 안보의 증진과 평화 구축의 대안으로 떠오른다.

“인간안보” (human security)의 개념은 1994년 UNDP가 제시한 개념으로서 이 또한 국가안보에 대한 대안적 개념이다. 인간안보 개념의 등장 배경을 보면 이는 냉전종식후 세계도처의 분쟁양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전지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1970년도와 80년도의 군사적 갈등의 90% 이상이 제3 세계에서 일어났고 대부분이 내전의 형태를 띠었으며,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여성이었다. 즉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위협은 오히려 내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Tickner, 2001).

이 관점의 주요내용은 국가안보보다 개인의 안전이 안전의 준거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UNDP는 인간안보를 “평화와 안보”, “경제발전 및 복지”, “사회정의”, “인권존중”, “환경보존”, “민주화”, “군축”, “법치”, “좋은 통치”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이들 요소간의 상호 불가분성 및 상호연관성을 강조하였다. 즉 이는 일상적인 위기의 극복을 문제 삼는 안보개념으로서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며 안보는 군사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 그 자체에 내재한 문제라고 본다 (사회경제적 박탈, 불균형 등). (조민, 2001; 임운택, 2004). 따라서 개발에 따른 빈부격차, 환경문제 등이 주요문제로 부각된다.

인간안보 개념은 국가안보를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안보개념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젠더문제와 관련하여 인간안보에서는 여성문제를 다룰 여지가 생겼다. 예컨대, 여성안보와 관련하여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등을 여성에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안보의 개념 역시 서구중심의 남성주의 사고에 기반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가부장제, 성차별 등 보다 근본적인 젠더 불평등 문제는 다루기가 어렵다.

2.3 기존 안보 개념의 문제점: 젠더화된 안보 보이지 않는다.

현실주의자의 국가안보라는 관점과는 달리 개인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고려할 때 국가중심적이며 군사주의 중심의 안보를 벗어나는 신사고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에 관련된 쟁점, 특별히 여성들이 필요하다는 점 또는 안보를 위해 행해진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려는 국가중심적 군사주의 중심의 안보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안보의 개념에서는 이를 고려할 여지가 생겼다. 그러나 그것은 안보에 “여성을 추가”

하는데 그치는 것이고 안보의 젠더링을 통한 근본적인 재구조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니다.

안보의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자들의 재정의는 젠더 위계질서 그 자체가 지배의 원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젠더 위계질서는 진정으로 포괄적인 안보에 대한 재정의에 있어서 방해물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그러나 이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의 개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음 <표 1>은 이 네 가지 안보 개념을 비교한 것이다.

<표 1> 국가안보, 인간안보, 여성안보 개념의 비교

	국가안보	공동안보	인간안보	여성안보
단위	개인, 국가, 국제체제 ⁷	국제질서	개인, 세계안보	여성, 세계안보
주요 내용	국가이익, 군사력 세력균형론	비공격적 방어, 군축, 정치적 질서의 신뢰,	개인의 안전, 일상의 안전	전쟁소멸과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
관점	현실주의	상호의존주의	인도주의	젠더 관점
문제점	세력균형론의 불확실 성, 서구중심 남성중심 적, 젠더문제 못 다룸		서구중심, 남성중심 일 부 여성안보 다룰 수 있으나 젠더불평등 못 다룸	너무 광범, 적용에 어 려움

아래에서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여성 비안보의 문제들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지, 어떻게 여성주의 관점에서 안보를 정의하고 분석해야 하는지 검토하려고 한다.

3.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3.1 여성이 보는 안보: 안보를 젠더링하기

여성들은 안보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타인의 불안정에 기초하는 안보는 안보가 아니다”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안보를 공포와 폭력,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로 규정하면서 인간안보 안의 소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신화, 2004). 이것은 물론 이전보다 진전된 관점이기도 하지만 이는 “여성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안보는 인간안보를 젠더링하는 재구조화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안보개념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범주를 재규정하고 바꾸는 것을 필요로 한다. 말하자면 전자가 기존의 안보논의에 끼어들기하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안보의 새판짜기를 시도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안보의 젠더링화의 입장에서 접근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젠더의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젠더’ 개념은 스콧 (Scott, 1986)에 의하면 성별간의 차이에 기초하는 사회적 관계의 구성요인이며, 권력관계를 결정하는 일방적인 방법이다. 젠더가 권력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의 해석을 구축하는 규범적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들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원적 대립의 형태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성을 정당화시킨다. 때문에 스콧은 이러한 이원적 대립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원적 대립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위계적 구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Scott, 1988; Tickner, 1992, 2001).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보면 젠더위계의 구조적 폭력 즉 여성의 체계적 비안보(불안정)가 국가체계 내부 및 외부 차원인 것으로 드러난다. 즉 국가안보의 다른 면은 여성 비안보이다. 더욱이, 국가, 주권, 정치, 정치적 정체성, 합법적 권위 등이 역사적으로 젠더 (바이어스)에 기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러나 국가의 이런 가부장적 (젠더) 기반은 신비화되어 보이지 않는다 (Peterson, 1992).

3.2 여성비안보의 문제들

그러면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드러나는 여성 비안보의 문제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역별로 나누어보면 (심영희, 2004) 경제영역에서는 우선 여성 빈곤, 여성 건강문제, 이주여성노동자 문제 등을 지적할 수 있고, 국가영역에서는 난민여성,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를, 사회/가족영역: 전시 강간, 인신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 문제, 성별분업, 성차별 등을, 그리고 공론영역에서는 가부장제, 불평등한 젠더권력관계, 일상의 권력 (심영희, 1994; 1998)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성 비안보의 문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여성 비안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간주된다. 그러면 여성 비안보의 문제는 왜 잘 보이지 않는가?

4. 왜 여성 비안보는 보이지 않는가?: 여성 비안보의 재생산

여성 비안보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 하고 탈정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Peterson, 1992). 또한 지배적인 국제관계학 담론인 현실주의가 남성의 경험, 남성의 세계관, 남성의 언어에 기반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떻게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비안보를 가시화하는 것은 남성주의의 지배를 역사적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와 삶의 방식에 새로운 조명을 해주고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대안적인 이해를 제시해주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러면 여성 비안보는 어떻게 재생산되나? 이는 국가, 산업자본주의, 과학의 등장 과정에서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구조적 폭력과 여성 비안보를 어떻게 비가시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고찰 (Peterson, 1992)을 통해 접근할 수 있다.

4.1 국가의 등장과 공사 이분법

Peterson (1992)은 역사적으로 국가, 산업자본주의, 과학의 등장과 함께 불평등한 젠더관계가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국가의 경우, 체계적인 남성주의적 및 계급지배가 제도화된 것은 초기국가에서이다. 공사 이분법이 생기면서 남성 여성간에 위계적 모델이 생겼다는 것이다. 근대국가에서 국가형성은 젠더, 계급, 인종(의계)의 권력관계를 구성하며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근대국가에서는 권위의 구성과정이 중앙집권화된 권력의 정당화에 핵심인데, 정치적 권위는 가부장의 “자연적” 권위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Locke와 같은 “자유주의적 가부장주의” 학자가 후에 가부장의 절대적 지배를 제한하지만, 남자의 여자에 대한 권위를 없앤 것은 아니고 이를 “자연적”인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을 역사에서 떼어내어 “자연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영역과 가족이라는 사적영역 사이의 경계를 규정하는 정치를 보이지 않게 했으며 그리하여 여성은 정치로부터 배제되고 그 활동은 가족영역에 관련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4.2 과학의 등장과 이성-감성 이분법

과학혁명은 삶의 방식 뿐 아니라 젠더 관계 및 젠더 상징성에 변화를 가져왔다. 남성은 아는 주체로 여성은 삶의 대상으로, 이 과정이 자연화되었다. 자연화되었다는 것은 탈역사화됨으로써 마치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되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17세기 계몽주의 이후 마녀사냥에 대한 Peterson (1992)의 설명에 의하면 마녀는 전문가주의에 환원되지 않는 의료기술을 소유한 여성들인데, 국가는 전쟁에 필요한 새로운 부를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동자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낙태와 그 외에 다른 출산통제를 관장하고 있었던 마녀들의 제거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지식과 기술을 가진 마녀가 없어짐으로써 여성은 삶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했고, 근대의 과학적 사고는 남성성과 관련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4.3 산업자본주의의 등장과 직장-가정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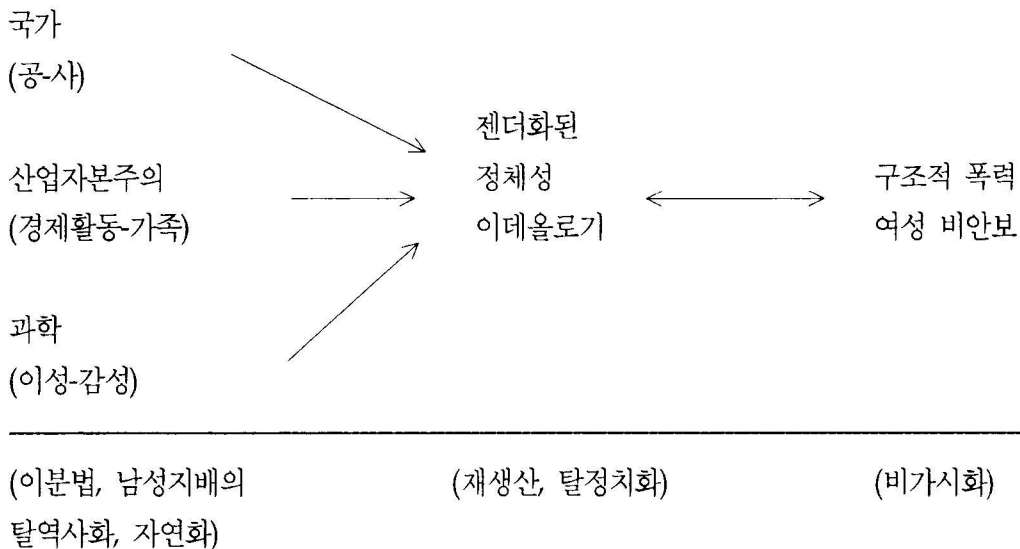
또한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으로 공사의 의미가 변화되었다. 아테네 폴리스에서는 사적 영역은 가구생산 및 재생산을 의미 했으며 경제도 포함했다. 이 때 사회는 아직 분리되지 않는 상태였다. 근대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사적 영역은 가족을 의미했다. 필수 생존생산, 즉 여성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난다. 산업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필수생존생산은 시장, 교환관계와 분화되고 남성의 일로 여겨지게 되었으며 사회경제라는 새 영역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공적 영역은 정치/국가/권력/강제 영역으로, 사적 영역은 사회/시장/경제/자발적 영역으로 분화되었다. 이렇게 되자 이런 사적 영역에 보다 관심을 주

게 되었다.

이처럼 제 3의 영역이 생겼음에도 공사 용어를 유지했는데, 즉 이제 사적 영역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경제영역을 지칭하게 되었고, 그 결과 가족/가구가 시야에서 더 멀리 사라지고 지워지게 되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유럽에서 가정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기술과 산업정치 양자가 결합되면서 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라는 제도화된 개념이 만들어졌다고 한다 (Tickner, 2001).

가족, 경제, 정치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분리는 젠더분화적 과정으로서 심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가족과 일의 분리로 젠더 정체성이 재형성된 것이다. 즉, 여성/여성성은 보살핌, 애정 있는 가정조성자로, 남성/남성성은 책임있는 피고용인으로 재형성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국가 개입은 가부장적 권력과 권위를 약화시켰으나 남성지배를 붕괴시키지는 않았고 이것은 사적 가부장제가 공적 가부장제로 이동하게 된에서 볼 수 있다.

다음 <그림 1>은 역사적으로 국가, 산업자본주의, 과학의 등장 과정에서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이것이 구조적 폭력과 여성 비안보를 어떻게 비가시화시켰는지 보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1> 여성 비안보가 비가시화되는 과정

4.4 젠더화된 권력관계와 국가

그러면 이러한 젠더화된 권력관계를 조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이는 국가다. 국가는 여러 방식으로 젠더권력관계의 주조직자이다. 첫째는 공식권위와 폭력에서, 즉 합법적 폭력의 사용을 통해서, 둘째는 문화적 제도와 규범형성을 통해서이다. 국가가 그의 가부장적 기반을 신비화시키는 것은 공사 묘사의 이데올로기를 구성, 조작함으로써이다 (Peterson, 1992).

예컨대 시민권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여성은 계산에 넣지 않았고, 정치적 정체성을 남성성으로 규정하고 규제하였다. 또한 국가의 성별은 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 위치에 남성들이 지배적이고, 남성성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강제기구나 하부구조 업무에 남성이 많고, 서비스나 파트타임에 여성이 많은 것도 그 한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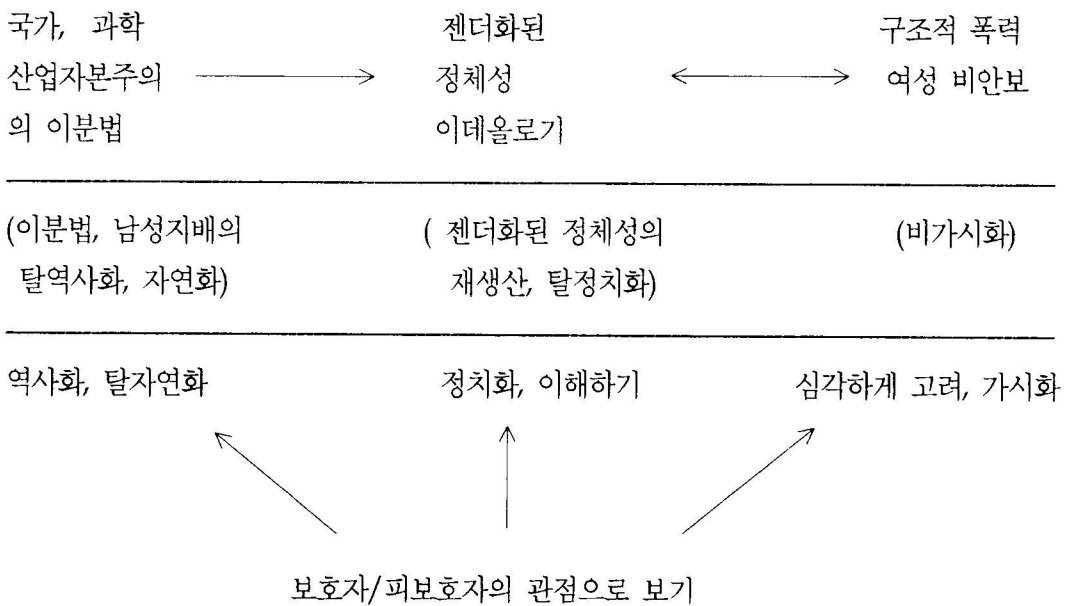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국가가 가부장적 권력유지를 위해 강제력과 위협을 어떻게 구사하나?: 사회질서의 비용과 혜택이 어떻게 분배되나?: 누구의 행복이 보장되나? 등의 질문이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여성은 남성 사회통제의 대상으로서 직접적 폭력 및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을 통해 통제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선택성은 예컨대, 가정폭력에 국가가 비개입하고, 개입시 매우 미약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전쟁과 군사주의에 대한 여성의 참여는 남전사, 여양육자의 이분법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성특권을 지속시키기 위한 여성의 종속이 군사주의와 전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Peterson, 1992).

5.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하기: 보호자/피보호자의 관점

많은 여성들이 전쟁, 빈곤, 폭력, 가부장제, 성차별 등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국가 안보라는 이름하에 여성의 비안보는 아직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구조적

폭력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세계안보를 다시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요구된다. 하나는 구조적 폭력을 역사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정치화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조적 폭력과 비안보를 재생산하고 탈정치화하는 정체성과 이데올로기를 이해하는 것이다. Peterson (1992)은 “보호”의 렌즈를 사용하여 보호를 다시 생각함으로써 접근하고 있다.

다음 <그림 2>는 구조적 폭력, 여성 비안보를 비가시화하는 과정과 함께 이를 가시화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시키는 과정

5.1 보호자/피보호자의 관점으로 보기

구조적 폭력,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하기 위하여 Peterson (1992)은 조직적 불법행위에서의 보호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불법행위자 (Racketeer)는 위협을 창조해놓고 나서 그 감소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바로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경우, 보호는 맞바꾸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외부전쟁의 위협을 흉내 내거나 자극하거나 심지어 날조한다는 것이다.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선택이 심각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보호의 형태로서 결혼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와 결혼은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로서 위계와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고 하면서 실은 그 위계와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etersons은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의 체계적 비용과 불안정은 효과적으로 신비화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를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의존을 재생산하는 것이다. 둘째, 탈중심화가 피보호자의 집합적 이익을 흐리게 한다. 셋째, 보호체계가 피보호자의 책임성을 흐리게 하면서 비참여적 동태를 재생산한다. 즉 피보호자가 보호자와 동일시한다. 넷째, 협박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등등이다.

5.2 보호자-피보호자의 관계 및 이분법의 작용

위에서 Scott (1986)은 젠더 개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이원적 대립의 형태로 보여지며 이에 따라 사회적 불평등성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이원적 대립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원적 대립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이들의 위계적 구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보호자 피보호자의 이원 대립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보호자와 피보호자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차이가 있는가? Peterson은 보호자에게도 딜레마가 있음을 지적한다. 즉 의존자는 보호자에게 짐이자 취약성이라는 것이다. 보호자는 사실 그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에 의존적이며,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호자/피보호자 관계는 새도매저키즘의 새디스트/매저키스트처럼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Chancer, 1992).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정체성을 살펴보면 보호자의 정체성은 영웅적이고 "자유"를 추구하며, 피보호자의 정체성은 비영웅적이고, 의존에 기반해 있다. 또한 보호자와 피보호자는 젠더화 되어 있는데, 남자는 보호자, 여자는 피보호자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3개의 이분법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첫째는 공-사의 이분법으로서 여성의 일을 평가절하하고, 재생산활동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는 이성-감성의 이분법으로서 남자는 정치를 탈맥락화된 것으로 보고, 여자는 정치를 맥락화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셋째, 보호자-피보호자 이분법으로서 의존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안의 렌즈로 보면 보호자-피보호자는 서로 얹혀 있고 (상호)의존은 비화된 지위에서 중심으로 재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Peterson, 1992).

6.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과 변혁을 위한 노력들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과 변혁을 위한 과제들이 무엇인지 제시하기에 앞서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목적을 양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표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에서부터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은 1970년대부터 실시되어 온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비판적인 변화 과정에서 도출된다. 따라서 먼저 유엔의 노력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노력을 살펴보겠다.

6.1 성주류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들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NGO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와 NGO가 함께 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연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유엔은 여성의 지위향상, 인권,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다음 <표 2>는 유엔의 성주류화의 역사적 전개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유엔의 성주류화 및 여성안보를 위한 노력

연도	기구 설치	주요 내용
1946	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여성지위원회 설치 (SCW)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작업들
1948		세계인권선언
1967		여성차별철폐선언 (DEDAW) 채택, 11개 분야 선택
1975		1차 세계여성회의의 개최 (멕시코),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선포, 1975-85 유엔 여성 10년으로 결정
1979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 채택 (1981년 발표, 2003년 174개국 가입)
1980		2차 세계여성회의의 개최 (코펜하겐)
1985		3차 세계여성회의의 개최,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 제시
1985	1976년 설치기구가 유엔여성개발기금 UNIFEM으로 전환	저개발국가의 가난한 여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 도모
1993.12.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UNHCHR) 산하 “여성에 대한 폭력조사 특별위원회” (Special Rapporteur of the Commiss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설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 채택 (비엔나)
1995		4차 세계여성대회 개최 (베이징), 12개 핵심분야 설정, “북경여성행동강령” 채택
1997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여성문제의 주류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
2000		“베이징 + 5 회의”
2000. 10.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채택, 전쟁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하는 기여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결의안

<표 2>에 나타난 성주류화의 노력들 중 몇가지 중요한 변화의 흐름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UN은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선포하고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여성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해 WID(Women in Development) 접근을 채택하였고, 이는 1980년대 말에 와서 국제기구와 많은 국가에서 제도화된 정책 접근법이 되었다. WID 접근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여성을 경제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한다. WID 접근의 구체적인 실현은 개발도상국의 보건, 영양, 가족계획, 소득창출과 같은 여성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발전 프로젝트에 초점이 두어졌다. 또한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의 주류에 참여하기 위한 법과 제도, 그리고 태도의 개혁과 여성을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를 강조하였다 (김경희, 2004).

그러나 WID는 남성과 여성간의 불평등한 성별 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이 역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WID 접근은 성역할 분업구조의 재편의 중요성에는 비중을 두지 않았다. 1985년 나이로비 UN 3차 여성대회에서는 그간의 여성발전 사업을 평가하면서, WID 접근이 여성의 성역할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상황을 간과하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남성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빚어내는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주목하는 젠더와 발전(Gender and Development-이하 GAD)관점의 분석틀을 발전시켜 왔다(김경희, 2004).

GAD 접근에서는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은 여성들이 발전과정에 통합되지 못했거나 훈련, 교육, 신용부족이 아니라 사회에 팽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 이데올로기와 남성주도의 권력 분배와 통제방식 때문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성문제 및 정책에 대한 GAD 접근은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여성을 발전 과정에서 소외시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역할변화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둔다(김경희, 2004).

결론적으로 9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내 외적으로 여성정책의 기본이념은 기존의 성역할을 수용하면서 여성을 발전과정에 통합하려는 접근으로부터 여성의 역량 강화(empowerment)를 추구하고 불평등한 양성관계의 변화를 추구하는 양성평등주의로

정착되고 있다.

성주류화는 국제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을 이루기 위해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이 모든 과정에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95년 베이징 여성대회에서 성(gender)과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행동강령에 수용하면서, 성주류화란 "체계적인 절차와 메카니즘의 양성평등을 향한 도약을 의미하며 젠더이슈를 주로 정부와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성 주류화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내용, 1) 사회의 모든 분야에 여성의 양적, 질적 참여의 확대를 의미하는 여성의 주류화, 2) 모든 정책분야 및 이를 다루는 기관에 성관점이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성관점의 주류화, 3) 기존의 남성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 정부 및 주류영역이 성인지적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주류의 전환을 포함하고 있다. 성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전략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도구와 방법이 개발되어 왔는데, 남성 중심성의 인식(성차별 실태와 경험), 성별화된 통계의 마련, 평등과 미래사회에 대한 비전갖기, 성평등 인식고양과 훈련,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법, 제도 내의 참여적 민주주의와 같은 다양한 도구들이 사용된다(김경희, 2004).

유엔의 성주류화 및 여성안보를 위한 노력들 중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안보와 관련해서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 (SC 1325) 이 매우 중요하다.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전쟁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하는 기여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결의안이다. 모두 18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 갈등예방, 평화과정의 의사결정에 여성참여와 대표성 증가를 촉구하는 것 (1-4항), 2) 평화유지 작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것 (5-8항), 3) 여성과 소녀의 권리보호를 촉구하는 것 (9-14항), 4) 기타 각각 여성집단과 상의, 연구수행, 젠더주류화를 촉구하는 것 (15, 16, 17항) 등이다. (18항은 포괄적인 항). 안보 분야에서 여성을 찾기 어려운 우리사회에서는 특히 이를 널리 알리고 실천해야 한다. (SC 1325를 이 글 뒤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음.)

6.2 우리나라의 노력

우리나라에서는 성주류화 전략의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 성인지적 정책의 형성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부터 시행되는 제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표 3> 참조)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시작되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10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과제로 정책과정에 성관점 통합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로 성인지적 예산과 성인지적 정책형성 및 분석을 정하고 있다. 이는 성주류화라는 국제적으로 수렴된 여성정책 전략에 근거한 것이다. 그만큼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 형성과 분석은 성주류화를 이루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인 셈이다.

여성안보와 관련해서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6항에 명시되어 있다. 즉 6.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확대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과제로서

-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확대
- 6-2. 평화·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 강화
-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세부과제들에서 드러나듯이 여성안보와 관련한 과제들은 아직은 평화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여성의 참여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있어서 젠더 관점의 통합 등 보다 실질적인 여성안보 확립을 위한 과제들이 개발되고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표 3>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1. 정책에 양성평 등 관점 통합	1-1. 여성정책 추진기구 확대 및 성인 지적 예산수립 1-2.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 과 여성의 대 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 대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 고	2-1. 공공부문 여성의 의사결정과정참여 확대 2-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 2-3. 기업의 여성관리직 진출 촉진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 을 위한 지원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3.여성 인적자원 의 개발과 활용	3-1. 여성 과학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3-2.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 및 전문 인력화 3-3. 여성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경 쟁력 제고 3-4. 여성정보화 촉진 3-5.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 강화
여성의 경쟁 력 제고를 위 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양성 9. 여성평생교육지원	4.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제 고	4-1. 고용상 기회균등과 남녀차별 개선 4-2. 모성보호 및 직장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4-3.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4-4. 남녀고용평등 의식의 확산 4-5.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근로조 건 보호와 능력개발 4-6. 보육서비스의 강화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 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5.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5-1. 여성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5-2. 여성자원봉사 활성화 5-3. 여성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확대
국제협력과 통일에서의 여 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서의 기여	6.평화·통일·국제 협력에서의 여성 의 기여확대	6-1. 통일대비 여성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 6-2. 평화·환경분야에서 여성역할강화 6-3. 여성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 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 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 및 권 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7.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7-1. 여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7-2. 여성의 자활능력 제고와 사회보장 권 확대 7-3. 여성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7-4.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 대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8-1.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제고 8-2. 가정폭력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추진 8-3. 남녀차별 및 성희롱 피해의 예방 과 구제강화
		9. 양성평등한 가 족정책 기반조성	9-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정책 기반 조성 9-2. 양성평등한 가족법·제도 구축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10-1. 평등문화의 확산과 정착 10-2.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10-3. 남녀평등한 미디어 문화의 정착

7.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과 변혁을 위한 과제들

7.1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

지배체계 (가부장제, 국가형성, 도구주의, 자본주의)들은 역사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이는 구조적 폭력을 성별화한다. 이들은 상호연결되어 있어서 이 중 어느 한 체계의 지배관계를 변혁하려면 모든 체계의 객관화하는 관행을 변혁해야 한다. 현재의 지배적 렌즈로는 이는 불가능한 과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형성에 대한 역사적 개관이 제시하듯이 체계적이고 혁명적인 변혁이 이전에 일어났었고 우리의 사회관계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있다.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도 변혁의 가능성이 있고, 정체성도 재형성될 수 있다.

그러면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은 어떠한 것인가? 현대사회의 민족갈등, 빈곤, 가정폭력 및 환경파괴에 같은 많은 유형의 위험은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다양한 유형의 군사, 경제, 생태학의 비안보는 불평등한 젠더관계와 관련이 있다. (Tickner, 2001). 보호자와 피보호자 사이의 관계는 젠더불평등에 의존한다 (Tickner, 2001; Peterson, 1992). 안보에 대한 군사화된 관점은 남성적인 특성을 중요시 여기며 남성은 안보제공자의 역할 때문에 1등 시민으로 격상된다.

Peterson (1992), Tickner (2001)등은 군사, 경제, 생태학적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위계적 사회관계가 본질임을 보여주고 이것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한다. 즉 진정한 안보는 전쟁소멸과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포함하는 불공정한 사회관계의 제거를 함께 필요로 한다.

7.2 변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혁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로서 다음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탈실증주의적 여성주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Perterson은 이것이 효과적으로 세계안보로 나아가는 전략으로서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첫째, 탈실증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환원주의적 이분법들이 포착되고 그들의 지배 동태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이 이분법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맥락속에 재위치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탈실증주의적 여성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이분법을 만드는 법칙과 그것이 생성한 이분법이 젠더화되기 때문이다. 이 렌즈를 통해서 분업이 사회정체성의 분리와 불가분하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둘째, 안보를 젠더링해야 한다. 일부 학자들은 여성안보를 인간안보 안의 소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신화, 2004). 하지만 이는 “여성을 추가”하는데 그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주의 관점에서 여성안보는 인간안보를 젠더링하는 재구조화의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전자가 안보에 끼어들기하는 관점이라면 후자는 안보의 재판짜기를 시도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글에서는 안보를 젠더링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시도해보았다. 페미니스트들은 현대의 비안보(불안정)가 이중적으로 젠더화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포괄적 안보를 위해서는 젠더와 관련된 비안보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젠더불평등을 제거하는 것이 어떻게 전지구적 여러 영역들의 비안보 (불안정)을 완화시키는 새로운 가능성과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젠더불평등을 극복하는 가능성은 여성의 경험이 남성과 동등한 원리위에서 여성의 경험이 국제관계의 주제에 포함되는 맥락에서, 나아가 국제관계학을 재정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극복은 오직 억압적인 젠더위계질서가 제거될 때만 가능하다 (Tickner, 2001).

셋째, 글로벌 거버넌스, 국제연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NGO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정부와 NGO가 함께 협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의 시대에는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연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유엔은 여성의 지위향상, 인권, 안보를 향상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넷째, 여성평화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판적 사회운동의 등장은 체계 위기와 새로운 정체성의 가능성을 의식하고 있음을 예시한다. 여성평화운동이 그 한 예이다.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성평화운동은 이중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 (심영희, 1998b, 12장). 한편으로는 기존의 안보과정에 활발하게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여성주의적 담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김경희 2004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시론” 한국의 양성평등적 여성 정책 모델의 개발을 위한 연구:한국 및 국제간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학진 3차년도 연구 보고서.

심영희 2004a “한국여성평화운동의 딜레마,”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심포지움 “폭력과 평화의 사회학,” 2004. 5. 21. 금, 고려대 국제관.

—2004b “아시아 여성평화네트워크의 필요성,”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 통권 18호.

—외 2002 함께 이루는 남녀평등, 서울: 나남.

—1998a “일상의 권력과 성폭력,”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8b 위험사회와 성폭력, 서울: 나남.

—1994 “일상생활과 권력: 직장, 가족,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12호.

이신화 2004 “인간안보와 여성,” 국가전략 10권 2호 여름, 세종연구소.

임운택 2004a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으로서 국제정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 이론과 사회

—b “신국제질서에서 평화와 안보를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공공재로서 “인간안보”와 “사회경제안보”에 대한 평화정책적 모색,” 한국사회학회 2004년도 특별심포지움 “폭력과 평화의 사회학,” 2004. 5. 21. 금, 고려대 국제관.

조민, 2001 “국제평화의 이론과 현실

http://www.goodfriends.or.kr/kor/daehwa6/rep6_1.hwp

Chancer, Lynne, 1992 Sadomasochism in Everyday Life: The Dynamics of Power and

Powerlessness, New Brunswick, NJ: Rutgers Univ. Press, 일상의 권력과 새도매저키즘: 지배의 논리와 속죄양 만들기, 심영희 역, 나남 출판, 1994.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1982,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Peterson, V. Spike ed. 1992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Scott, Joan 1986 "Gender: A Useful Category of Historical Analysis," American Historical Review (December, 1986), 91 (5), 1053-1075. Scott, Gender and the Politics of Histor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에 reprint 됨.

Tickner, J. Ann 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여성과 국제정치, 황영주 외 역,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1.

부록 :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2000년 10월 31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은 전쟁이 여성에게 주는 영향, 여성이 갈등해결과 지속가능한 평화에 하는 기여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결의안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1. 회원국가들이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국가, 지역, 국제기구와 메커니즘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대표성의 증가를 확보하도록 촉구한다.
2. 사무총장이 갈등해결과 평화 과정의 의사결정 수준들에서 여성의 참여 증가를 요구하는 그의 전략적 행동계획을 구현하도록 격려한다.
3. 사무총장이 그를 대신하여 일하기 위한 특별 대표나 대사 envoys로 더 많은 여성들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국가들이 사무총장에게 후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중앙리스트에 포함시킨다.
4. 나아가 사무총장이 유엔 현장기반 작전에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확장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특히 군사 옵저버, 민간경찰, 인권 및 인도주의적 인사가운데 확대를 촉구한다.
5. 평화유지 작업에 젠더관점을 기꺼이 통합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며, 적절한 곳에서는 현장 작전이 젠더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확보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촉구한다.
6. 사무총장이 회원국가들에게 여성의 보호, 권리, 및 특별한 욕구에 대해 또한 모든 평화유지와 평화만들기 조치에서 여성을 관련시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훈련 가이드라인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회원국가들이 이 요소들 뿐만 아니라 HIV/AIDS 의식

훈련도 또한 배치준비를 위한 군사 및 민간경찰에 대한 국가 훈련 프로그램에 통합하도록 초청한다. 나아가 평화유지 작전을 하는 민간인사도 비슷한 훈련을 받도록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7. 회원국가들이 성인지적 훈련 노력들에 대한 자발적인 재정적, 기술적, 및 논리적 지원을 증가시키도록 촉구한다. 이는 적절한 기금과 프로그램들이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데 특히 유엔여성기금, 유엔아동기금,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및 다른 적절한 기구들이다.

8. 평화협약을 타협하거나 구현할 때,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이 젠더관점을 채택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특히 1) 송환과 재정착 도중에 그리고 재할, 재통합 및 갈등 후 재건을 위한 기간 중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요구, b) 지방 여성의 평화 주도권과 갈등해결의 토착적 과정을 지원하는 조치들, 그리고 평화협약의 모든 구현 메커니즘에 여성을 관련시키는 조치들, c)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헌법, 선거체계, 경찰 및 사법과 관련될 때 그들의 인권보호와 존중을 확보하는 조치들을 포함한다.

9. 무력갈등의 모든 당사자들이 여성과 소녀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보호에 적용가능한 국제법, 특히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의 이에 대한 추가 의정서, 1951년의 난민협약과 1967년의 이에 대한 의정서, 1979년의 여성차별철폐협약 (CEDAW)과 1999년의 이에 대한 선택의정서에 대한 2000년 10월 31일의 안전보장이사회의 협약, 그리고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2000년 5월 25일의 이에 대한 두가지 선택의정서하에서 적용가능한 의무를 충분히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로마법전의 관련 조항을 염두에 둘 것을 요구한다.

10. 모든 무력갈등의 당사자들이 성에 기반한 폭력, 특히 강간 및 다른 형태의 성적 학대, 그리고 무력갈등 상황에서의 모든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1. 모든 국가들이 대량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성폭력과 관련되는 범죄를 포함하는 전쟁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한 불처벌을 끝내고 이에 책임있는 자들을 기소하는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며, 이런 점에서 가능한 곳에서는 이런 범죄

들을 사면조항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12. 모든 무력당사자들이 난민캠프와 정착촌의 민간적 인도주의적 성격을 존중하고, 디장인할 때 여성과 소녀들의 특별한 욕구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1998년 11월 19일의 결의안 1208을 상기한다.

13. 무장해제, 동원해제 및 재통합 계획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남성과 여성 이전 전투원들의 요구가 다름을 고려하고 이들의 피부양자들의 욕구를 고려하도록 격려한다.

14. 유엔 헌장 41조하에서 조치들이 채택될때는 언제나 민간 인구에 대한 잠재적 영향을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며, 적절한 인도주의적 예외를 고려하기 위하여 여성과 소녀의 특별한 욕구를 염두에 둘 것을 재확인한다.

15. 안전보장이사회의 사명은 젠더 문제와 여성권리를 고려하도록 확보할 의지가 있음을 표현하며 이는 지방 및 국제 여성집단들과 상의를 통해서 한다.

16.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무력갈등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평화만들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및 평화과정과 갈등해결의 젠더차원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초청하며, 나아가 이 연구결과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을 유엔의 모든 회원국들에게 돌리도록 초청한다.

17.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적절한 곳에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보고속에 평화유지 사명 전반을 통한 젠더 주류화의 진전과 여성과 소녀에 관련된 다른 모든 측면들도 포함시키도록 요청한다.

18. 이 일에 능동적으로 종사하도록 결정한다.

<토론문>

여성, 안보, 한반도 평화

정경란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연대위원장

이라크전쟁과 주한미군 차출과 재배치, 한반도 핵위기, 남북화해협력 강화 속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여성평화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1. 전쟁에 반대하는 여성들

연합뉴스가 7월 24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천329명 가운데 56.9%인 756명이 이라크 파병에 '찬성', 42.4% 563명으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나왔다. 남녀별로는 남자의 찬성률이 59%로 조사된 반면 여자는 반대 의견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2004/06/29 13:29)

이 여성들을 어떻게 평화운동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2 평화와 안보 개념 사용문제

1) 안보개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관심과 그 연구(security studies)가 주로 국가안보연구 또는 전략연구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평화교육가와 평화활동가 사이에서 안보개념 사용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안보연구가 국가를 중심에 두고, 주로 개인이익과 정치적 공동체로서의 국가 이익은 대체로 일치하며, 이에 따라서 국가안보는 개인안보의 전제 조건이 되고 나아가 국가의 존망은 현실적인 힘, 즉 군사력에 의해서 확보되고 지탱되며, 이에 따라서 군사력은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평화운동가와 교육가들은 안보개념 사용이 아닌 평화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예를

들어, 2003년 IIPE 서울 국제회의 "Educating for Peace in Divided Societies"에 참석한 필리핀 여성평화교육가, 2004년 6월 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Regional Conference 참석한 파키스탄 여성평화활동가는 안보개념 사용을 거부하고 평화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 평화와 안보개념의 접점

① 평화: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전쟁, 폭력, 적대의 부재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정의와 평등 및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들의 향유를 포함한다.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포괄.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문건)

② 여성단체의 안보논의

2000년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에서는 진정한 안보를 다음 4가지 항목에 근거한다고 단언한다.

- *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인간과 자연의 삶을 반드시 유지시켜야 한다.
- * 인간이 살아가는 기초가 되는 의, 식, 주 및 건강 보험 체계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 *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의 차이는 인정, 존중되어야 한다.
- * 인간과 자연환경 모두 보호받아야 한다.

국제회담 참가자들은 군사화된 질서가 여성과 민중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단계적으로 비무장화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는 비군사화의 대안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군사 작전, 군사비 그리고 군사 문화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군사화된 국제 안보체계는 자연 환경,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요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안보 재정의를 위한 국제여성회담, 나하, 오키나와, 일본, 2000. 6. 22-25. 최종 성명서)

3. 안보 개념의 세밀화 필요

인간안보와 공동안보의 구분, 여성안보의 단위 등 안보 개념의 세밀화가 필요하다. 안보의 주체와 객체, 위협의 원천, 안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 목적 등을 포괄하는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표: 안전보장의 제개념의 비교>

	안전보장의 주체	객체	위협 원천	수단	목적
전통적 국가안보	국가	국가	국외/군사적	군사력	국가(국민)의 생존
인간안보	국가 / 국제사회 (UN)	개인	구조적 사회문제(빈곤, 인권억압환경파괴, 범죄, 군사화), 내전	인간중심의 개발, 평등의 배당	개개인의 생존능력, 지역의 안정(예방외교)
사회안보	국가, 사회	사회	사회내외의 집단	사회통치정책, 다문화주의정책	사회의 정체성 유지
지구 규모의 안보	국가/ 국제사회 (UN 등)	지구	분쟁, 전쟁, 자연 문명	예방외교(조기경보, 조사) 개입	인류의 생존

栗栖薫子, 人間 安全保障, 일본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 제117호, 안전보장의 이론과 정책, 1998년 3월, 98쪽, 정경란,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새로운 안보개념의 발전과 대중화 모색, 여성평화아카데미 발표문, 평화여성회, 1999, 12에서 재인용

4. 여성평화운동의 입장에서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노력

UN, 유럽의회, OSCE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 여성의 안보, 평화영역에서 참여를 위한 결의안이나 행동강령이 채택되었다.⁵⁶⁾

여성평화운동의 입장에서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 왔다.

첫째, 국제여성평화운동 차원에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진행된 <총락에서부터 협상테이블까지: 여성과 평화형성> 국제캠페인이 있었다. 인터내셔널 어릿과 81개 NGO들이 갈등 전환과 평화수립과정에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국 정부가 베이징

56) UN 안보리 결의안 1325,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n Participation of Women in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채택 (2000.11), OSCE Action Plan for Gender Issues (2000), G8 외무장관 갈등예방에서 여성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성명서 채택(2001.7)

여성회의에서 택했던 정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여성들의 서명을 받아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평화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갈등 상황에서 젠다의 고려(gender considerations), 난민과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특별한 필요, 화해와 평화수립 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정의, 여성의 지도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둘째, 기층여성운동에서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푸에르토리코-미국 여성네트워크"는 미국의 군사작전, 미군기지, 군사주의가 여성, 어린이, 청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젠더와 인간안보, 소파(Status of Forces Agreement)와 환경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군사기지, 군대를 반대하는 오키나와여성회"(오키나와여성단체)는 여성안보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셋째, 국제평화자유연합(원프: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은 피스우먼 프로젝트(The PeaceWomen Project)를 통해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UN 결의안 1325의 집행을 모니터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피스우먼 프로젝트는 ①웹사이트(www.peacewomen.org)를 통해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무장갈등 상황에서 여성의 평화노력을 소개하며 ② 격주로 이메일 뉴스레터1325 PeaceWomen E-News를 발간하고 ③ 유엔정책과정에 제안을 하고 ④ 시민사회, 유엔관료, 정부와 함께 UN결의안 1325 집행과정에서 협력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5. 안보영역의 젠더화된 관점 극복과 '여성적' 경험

심대표의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보면 젠더위계의 구조적 폭력 즉 여성의 체계적 불안보(불안정)가 국가체계 내부 및 외부 차원인 것으로 드러나"고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존의 안보과정에 활발하게 끼어들기를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의한다.

그렇다면 전쟁에 반대하는 기층여성을 주체적으로 안보영역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재생산, 보살핌과 같은 '여성적' 경험을 평화와 안보 과정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더욱 공정하고 안정된 세계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적 특질을 공적 생활에서 어떻게 재평가할 것인가하는 문제이다.

-보살핌과 책임은 공적, 사적인 생명의 모든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측면이다. 보살핌과 책임이라는 가치는 아이 양육을 위한 부양과 책임에 관련되는 임무에서 남성이 이러한 사적 영역에 동등하게참여할 때만이 공적영역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 국제정치 영역을 포함한 모든 공적영역에서 높이 평가되는 것들이 사적영역(가정)에서 높이 평가되는 가치들과 동떨어져서는 안된다.

-여성들이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려면 평화가 필요한데 그런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여성적 경험의 자산을 적극 동원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이른바 '남성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자질(능동성, 진취성)의 동원도 필요 나아가서 여성적, 남성적이라는 이데올로기 낙인을 해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6. 한반도평화와 여성의 과제

이라크 한국군 파병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한미 동맹관계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청이 없었다면 한국군을 파병했겠는가? 불법전쟁에 연루될 수 밖에 없는 동맹구조에 여성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한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성격전환과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동북아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 여성들이 한반도가 전환기적 국면에 있다는 근본적 인식을 토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라크전쟁, 주한미군 재편 및 미국의 군사전략, 남북화해협력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이라크 파병
- TSR, TCR을 통한 유라시아 하나의 경제권의 가능성
- 중국의 부상과 한미동맹
- 북한핵문제

2) 군사문화와 군사력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안보에 대한 여성적 입장을 토대로

142-1에 기반한 미국의 군사력 증강에 반대하고 주한미군의 병력 감축을 환영한다.

3) 한미동맹을 보다 평등한 관계로 재편하는 데 여성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연합방위체제의 해소, 한-미지휘체제의 개편, 사전협의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미사일 방어체제에 한국의 편입 반대,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이 제도화/기구화 추구

4) 여성이 바라는 진정한 안보를 위해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차원에서 군사비 증대를 반대한다. 주한미군이 담보해왔던 군사력을 군사력으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 협력과 동북아 외교를 통해 군비경쟁이 아니라 신뢰구축을 확대한다. 군사비 증액부분을 기초 생활에 필요한 의, 식, 주, 건강 보험 그리고 교육을 위해 써야한다.

5) 여성들의 관점, 지위 그리고 이슈들이 평화와 안보의 모든 부분에 중심이 되고 부대의 철수와 전환에 관한 결정과 계획에 여성들을 참여시켜야한다. 현재 이라크파병, 한미동맹 재편,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주요 결정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에 여성은 한명도 없다.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외교, 국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UN 결의안 1325의 한국정부의 집행을 위해 여성단체들이 해외단체(월프)와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여성이 바라는 안보에 대한 간담회를 반전평화위원회와 공동개최 또는 외교통상부, 국방부 상임위원회 의원과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 외교, 국방, 안보 분야의 여성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6) 여성과 어린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군기지 재편과 미군기지 이전은 반드시 지역사회의 주민과 여성들의 요구를 검토해서 진행해야한다.

7) 남북 경제, 사회 문화 등 화해협력 조치에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김민정 /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 안보 자체에 대한 재정의

안보개념에 대해서 기존의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국가안보개념을 우선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서 인간안보(혹은 포괄적 안보)를 말하고 여성의 관점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의 재구성을 주장하였다. 여성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안보개념에서는 국가에 의한 젠더화된 구조적 비안보상황에 대한 비판을 주로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필자가 주장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본 안보개념은 무엇인가? 필자는 본문에서 여성주의 관점에서 볼 때 드러나는 여성 비안보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영역에서의 여성 빈곤 및 이주 여성노동자 문제, 국가영역에서는 난민여성, 기지촌 여성문제, 사회 영역에서는 전시장간, 성폭력 등의 여성의 육체에 대한 공격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여성의 관점에서 안보를 재정의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비안보상황을 아우르는 안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쟁은 없지만 끊임없이 전쟁을 준비하는 상황은 기존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안보가 보장된 상태이지만 여성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기지촌에 상존하는 여성비하가 있고 군사적 필요라는 절대절명의 국가적 과제 때문에 여성적인 것은 사회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상황은 일반적인 안보개념에서 안보가 보장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관점에서는 분명한 비안보이다. 이런 점에서 안보 개념 자체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안보 개념들 예컨대 포괄적 안보 혹은 인간안보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안보는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한 규명도 필요하다. 여성주의적 관점의 안보개념이 인간안보에서 말하는 동서문제, 남북문제, 환경파괴, 경제사회적 상황악화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안보개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젠더의 관점을 부각하면서 인간안보와는 차별화된 다른 안보개념을 제시하는지? 본문의 논의에서 보면 여성주의적 안보개념은 협의적으로 본다면 여성의 안보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인간안보개념에 여성주의적 안보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보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면 여성주의적 안보개념은 대안적 안보개념이 됨으로써 광범위한 범위가 부여될 수 있고 여기에는 인간안보개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안보개념들과의 관계에 대한 규명이 포함되었으면 한다.

2. 여성의 비안보상황을 보이지 않게 하는 재생산구조

이것을 공사영역의 분리, 경제활동과 가족의 분리, 이성과 감성의 분리등의 이분법적인 구조를 설명하면서 젠더화된 정체성 이데올로기라고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아마도 사회적 성역할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 비안보상황을 재생산하는 구조는 무엇보다도 근대 민족국가개념이 아닌가한다. 근대 민족국가의 군사화된 목표와 체제가 사회의 구석구석에 군사주의 문화를 심었고 군사주의문화는 남성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성을 하위의 개념에 두는 구조를 낳았다. 이하에서 성성을 매개로 하는 많은 젠더화된 비안보상황을 낳았다고 본다. 민족국가 이전에도 국가 간의 전쟁과 영토확장이 있어왔지만 이러한 전쟁 및 영토확장 과정은 국가 전체와 동일시되기 보다는 왕가와 동일시 되었다. 그러나 근대의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국가 자체가 국가구성원과 동일시 되고 국가구성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국가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족주의의 구현과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위기시에는 여성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희생을 강요당했고 민족경제발전과 원시적 자본 축적 및 값싼 노동력의 주요원천으로 희생되어야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적인 것은 민족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필요한 훌륭한 군인으로 치환되었고 여성들은 나약한 존재, 보호받아야할 존재로 치환되었다. 이런 점에서 젠더화된 비안보상황은 결국 남성중심의 민족국가가 만들어낸 결과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의 젠더적 비안보상황의 이해를 위해서는 민족국가의 형성과정과 이의 발전에 대한 젠더적 이해가 필요하다.

3. 안보를 젠더링한다는 것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험이 국제관계의 주제로 포함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국제관계학을 재정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보편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2004년 한국의 상황, 즉 남북분단의 현실에 대한 해석, 파병을 둘러싼 논의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해야하지 않을까?

4. 여성은 더 평화적인가?

안보문제에 여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 논의인지 우리는 늘 망설인다. 이미 성립된 담론의 구조 속에서 여성들은 안보의 소비자이지 결코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의 문제는 웬지 여성들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 국회의 국방위원회나 정부의 국방부장관을 여성과 연결시키는 것이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답으로 우리는 여성은 남성보다 더 평화적이기 때문이라는 논의를 종종 펴곤 한다. 최근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에서도 여성의 63%가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고 남성의 경우에는 41%만이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것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평화적이라고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곤 한다. 이를 연결하여 여성은 남성보다 평화적이기 때문에 남성중심의 국제질서는 전쟁과 대결, 약육강식의 세력대결장이 형성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보다 평화적인 정책결정으로 연결되어 전쟁이 지양되고 평화를 향해서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여성시각으로 국제질서를 재편해야한다는 논의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잘못하면 남성중심의 국제질서에 여성의 참여를 더욱 제한할 수 있는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다. 즉 국제관계 자체의 속성이 세력대결의 장이기 때문에 평화적인 여성의 경우에는 참여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국제관계는 기본적으로 국력을 바탕으로 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상태'이고 국가들의 행동의 목표는 국력을 키우거나, 국력을 과시하거나 국력을 유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논리적으로 여성이 평화적이라는 주장은 자칫하면 국제관계의 탈여성적인 속성과 연결될 수 있다.

한편 이론적으로 볼 때 여성이 평화적이라는 주장은 본질주의로서 본질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다르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여성과 남성은 다르기 때문에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은 분리되어야하고 이러한 기능적인 구분은 건전한 사회의 작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결국 남녀불평등 사회가 역할의 구분, 사회적 역할의 강요를 의미한다는 여성이 평화적이라는 주장은 오히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이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지 혹은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사회화과정에 의해서 다르게 교육받아와서 다른지는 논의가 여지가 남아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인류가 한번도 아무런 외부적인 압력없이 남녀가 교육받아오지 않은 결과로서의 현재의 시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여성은 평화적이어야한다고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그 교육의 효과로서 여성은 현재 남성보

다 더 평화적이라고 노력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본성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실제로 남녀간에는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 젠더갭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보수적인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보수적인 정당을 선호하고 보수적인 정책을 선호한다. 이러한 전통적인 젠더갭의 영역에서 본다면 여성은 결코 평화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여성과 안보를 연결시킬 때 여성의 본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위험한 논리이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여성과 안보를 연결시킬 때 기존의 안보개념은 여성들을 비안보상황에 노출시키고 비안보상황은 여성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여성은 새로운 안보개념을 창출하는 주체여야하고 새로운 안보개념의 담론을 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특히 한반도와 같이 기존의 안보개념에서 볼 때 극심한 안보의 대립 상황은 여성들에게 절대적인 비안보의 상황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적 당면과제로 그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조차하지 않는 통일이라는 상황 역시 여성의 입장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안보개념은 여성들에게 심각한 비안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안보개념이 만들어놓은 국제질서에 대한 대안세력은 결국 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역할 강조

본문에서 필자는 새로운 안보개념의 확장을 위해서 국제기구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물론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는 본문에서 지적하였듯이 비젠더화된 안보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NGO와 더불어 국제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유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이 가지는 역할의 성격에 대한 규명이 보다 철저해야한다. 국제기구의 정책결정과정은 때에 따라서 상당히 강대국 중심적일 수도 있다. 국제기구마다 그 정책결정과정이 다르지만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새로운 행위자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약소국에 강요하기 보다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규범화하고 이를 간접적으로 약소국에 강요하기도 한다. 여성문제에 있어서도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정책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서구식의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계관을 제공하는 측면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그 정책의 성격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기구의 정책이 가지는 실효성이

다. 주지하듯이 국제연합의 정책은 강제성을 띠지 않고 다만 권고적인 역할을 할 뿐이다. 유엔 총회에서 내리는 결의들은 회원국들에게 권고일 뿐이지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회원국들에게 어떠한 직접적인 제약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면을 생각할 때 국제기구의 정책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메커니즘을 거쳐 공론화되고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더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5. 국가의 이익

국가의 이익은 항상 여성의 이익에 상반되는가? 국가의 이익은 남성의 이익에 다른 표현인가? 정치학적으로 국가의 이익은 3가지 차원에서 설명된다. 어느 국가이든지 보편적으로 우선 첫째 국가의 안위라는 이익을 가진다. 모든 국가는 국가의 안위를 가장 중요한 이익으로 상정한다.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국방에 힘써야한다면 군인을 늘리고 군사무기를 개발하고 군사훈련을 하며 국경을 지키고 외국과의 군사적 대립에서 승리하도록 모든 노력을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군인이 될 수도 없고 군사무기개발에 드는 비용을 위해서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비용이 삭감되어도 감수해야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외국과 동맹을 하고 외국군에 기지를 제공하는데 따르는 여러 희생을 감수해야한다. 두 번째 국가의 이익은 경제발전이다. 최근에 들어서 안위와 거의 구분이 없을 정도로 중시되고 있는 개념이다. 과거와 같이 군사적인 패배를 통해서 국가의 안위가 위협받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고 경제적인 실패가 국가의 안위에 크게 손상을 주는 시대로 돌입하였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더욱 주목되는 국가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영토내 모든 자원을 효과적으로 추출해야하고 적재적소에 배분해야하며 최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국내 경제의 발전을 촉진해야한다. 최근과 같은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는 더욱 경제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구상해내고 이를 추진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여성들은 값싼 임금에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감수해야하며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퇴사해야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국가의 경제발전이라는 이익이 원래 남성중심적은 아니지만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할 수 있다. 세 번째의 국가이익은 정치적 안정이다. 모든 국가는 영토내에서 안정된 정치체제를 이루고 이 체제의 안정을 공고히 하는 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정치적 행위자들을 주장을 만족시켜야하지만 언제나 제한된 자원은 이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모든 국가들은 국가를 단위화함으로써

간소화하여 이들 단위에 대한 여러 가지 급부를 제공하고 이들 단위들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기존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한다. 특히 국가가 심각한 변동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러한 이익은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 때에 일반적으로 국가는 가족이데올로기를 강화하여 가족으로 하여금 국가를 대신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 기존을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하도록 독려한다. 가족의 장인 아버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해주고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이 질서있게 정돈되도록 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상실하기도 하며 권리들을 박탈당하기도 한다.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전형적으로 가족중심의 이데올로기가 강조되었고 동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향유하였던 상당한 권리들이 박탈되었다. 또한 서독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일자리를 동독의 남성들에게 내주어야하면서 심각한 박탈자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 안정이라는 국가의 이익 역시 젠더의 관점에서 재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3가지 이익은 사실상 무성적인 듯 보이지만 상당히 반여성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평화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참여 -----

- 문화행사, 토론회, 연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회비 납부로 평화여성회 활동을 후원합니다.
- 소식지와 자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자원활동 및 다양한 회원모임에 참여합니다.
- 평화여성회 웹사이트 <http://www.peacewomen.or.kr>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회원들끼리 생각과 정보를 나눌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서 ●

기본사항	이름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 이동전화
연락처(집)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연락처(직장)	주소 직장명 전화번호	우편물받을곳 자택 ☐ 직장 ☐
회비구분	일반회원 월5천원 ☐ 월1만원 ☐ 월2만원 ☐ 월3만원 ☐ 기타 ☐ 학생회원(초중고생) 월3천원 ☐ 연2만원 ☐ 연3만원 ☐ 기타 ☐	
회비납부방식	CMS자동이체	
CMS신청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가입동기		
관심분야	정세대응 ☐ 통일과제 ☐ 국방과제 ☐ 평화교육문화 ☐ 갈등해결 ☐ 평화심성 ☐ 소식지발행 ☐ 스터디모임 ☐ 평화축제 ☐ 기타 ☐	
가입일	200 년 월 일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송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 (서울은행) 예금주 :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전승 02-2275-4861

이메일 wmp@peacewomen.or.kr / www.peacewomen.or.kr

후원계좌: 29508-1128009(서울은행) 예금주: (사)평화를만드는여성회

